

제42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6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1.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요청안 1
2.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 1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춘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

○위원장 이춘석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요청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후보자의 국정 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며 검찰, 출입국, 교정 등을 관할하는 중요한 부처인 만큼 그 수장인 장관의 자질과 철학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대표로서 각자의 소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정책 비전 등을 면밀히 살펴 주시고 후보자께서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정쟁이 아닌 성숙한 민주주의의 과정이자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공직후보자 정성호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21년 전 제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후 여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오는 동안 항상 민주주의의 심장은 의회라는 신념을 가지고 여야의 대화와 타협, 양보와 합의를 중시해 왔습니다. 비록 시간이 더 걸리고 어렵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결국에는 더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하며 이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자 국회의 존재 이유라고 믿어 왔습니다.

만일 장관이 된다면 그동안의 소신과 같이 국회를 존중하고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라도 여야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책과 고견을 깊이 새기며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바꿀 것은 주저 없이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도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을 가슴에 새기며 저의 지난 과거를 겸허히 되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절체절명의 세계사적 전환기, 국제질서 재편의 혼란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일구어 나가야 하는 책임과 소명은 국회와 정부 모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가운데 국론을 통합해 가야 합니다.

법무행정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민생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면서 당면 과제인 검찰개혁도 이루어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민생을 침해하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척결과 예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

고자 합니다.

국민이 범죄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국민께서 안전하지 않다면 민생도 경제도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히 마약범죄, 디지털성범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임금체불, 불법사금융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파괴하는 민생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뿌리째 도려내고 신종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일구어 가겠습니다.

법무행정의 대원칙은 국민에 대한 봉사입니다. 법무행정의 혁신은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호트러짐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서비스를 개선하고, 특히 AI 등 첨단기술을 폭넓게 적용해 법무행정의 과학화와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법무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봉사 의식과 사명감 고취에 힘쓰면서 어려운 점을 세심하게 살피며 늘 소통하겠습니다.

과거 잘못이 있었다면 겸허히 인정하고 내려놓을 기득권이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다면 국민의 관점에서 과감히 정리해 국민에 봉사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또한 늘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임을 다하는 법무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부 구성원들과 늘 소통하고 개선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바꾸며 잘한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격려하여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은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국민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검찰개혁 논의를 이끌어 주시고 더 나아가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무부가 당면한 다른 과제들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외국인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당면한 정책환경 변화에 늦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이민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 여야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민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정부내 논의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정행정은 고질적인 과밀 수용, 교정·교화의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높은 재범률, 교정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 여러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교정행정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고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한 민법 등 기본 법제 정비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송무 및 국제투자분쟁 대응 역량의 증진,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자 등 인권 보호, 법무공무원 교육의 선진화, 역량 강화 등 법무행정 주요 과제 역시 소홀함이 없이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조위로 등 여러 분들을 만나 소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억강부약(抑強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제도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바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고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가운데 변화된 사법시스템을 연착륙시켜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과제를 여야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견도 폭넓게 듣겠습니다. 지난 33년간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경험을 살려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 조직문화의 개선을 차분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나눠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주질의시간은 간사님들 간의 사전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배숙 위원님……

○곽규택 위원 자료제출 요청……

○조배숙 위원 자료제출이 안 돼서요.

○위원장 이춘석 천천히 순서대로 하시지요. 앞에부터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법무부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3대 특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검에서 각 검찰청에 파견검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일선 청에서 그 파견검사 요청에 따라서 파견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입니다.

법무부가 특검 파견검사 구성 여기에 관여를 하거나, 특히 용산 대통령실에서 파견검사를 누구로 보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는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관여를 하는 순간 범죄가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특검에서 각 검찰청에 어느 검사를 파견 요청했는지 그리고 실제 파견 요청을 한 대로 일선 검찰청에서 파견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에서 각 검찰청에 파견 요청을 한 공문 사본 그리고 파견 요청을 한 검사와 실제로 파견이 된

검사가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면 ‘특검의 파견 요청 공문 사본, 각 특검의 파견 요청 현황 및 파견 요청 대상자 명단 등은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그것을 기관에서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외교·국가안보·대북관계, 이런 사유 외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청문회 종료 전까지 반드시 제출이 되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각 3대 특검에서 일선 청에 파견 요청을 한 원래의 파견 요청 공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취합한다면 한두 시간이면 취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명단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문 일체를, 특검에서 처음에 일선 검찰청에 어느 검사를 파견 요청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오늘 청문회 중에 자료제출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자료제출 신청을 다 받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송석준 위원 순서대로 그냥……

○위원장 이춘석 손을 먼저 들어 가지고.

○조배숙 위원 자료제출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지금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료제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야만 검증할 수가 있거든요.

요하게 김민석 총리 청문회 때부터 다른 장관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루만 버티면 된다, 우리가 국회 과반수니까, 이러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국민한테 굉장히 오만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관님은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장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제출이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사생활 침해라 그래 갖고 결국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동의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후보자 배우자 재산이 수십억 원대로 급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증식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직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 투명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보면 2004년 후보자 배우자 재산은 4억 5200여만 원 정도고 25년에는 35억으로 무려 30억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배우자 연간 사업소득이 1억이 넘는 상황에서도 이런 재산 증가 경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돌아온 답변은 아까처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참고해 달라’ 이런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후보자 배우자께서 이 부분을 동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받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구자료는 제가 보냈지만 후보자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그중에서 부동산 거래내역입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 배우자가 화가이신데 미술품 판매내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22년도…… 그러니까 2021년, 23년, 24년은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22년 것은 빠졌습니다. 이것을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공직후보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새로운 입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질의 때 물어보겠고요. 뭐냐 하면 프랑스 형법에서는 5년 이하

의 구금형에 처하는 중죄·경죄를 범한 피의자와 일상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 재산의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가공의 자금 출처를 제공해 은닉했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의 경우에는 배추농사에 투자했다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소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직자가 되려고 하면 본인과 가족 등 재산내역을 신고하고 자금 출처를 소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이 자체로 처벌하려는 법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말씀해 주시지요.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정확히 호명을 해 주셔야 제가……

위원장님, 이번에 인사청문요청안은 대통령실에서 위원장님께 제출된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춘석 국회로 제출합니다.

○송석준 위원 국회로?

○위원장 이춘석 예.

○송석준 위원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춘석 대통령실에서 거쳐서 인사혁신처에서 국회로 보낸답니다.

○송석준 위원 어쨌면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 아주 굉장히 현안이 많은 중요한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인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국회를 우롱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부실한 인사청문요청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청문요청안에 보면 2016년 재산 공보를 보냈는데 2014년분을 이렇게 또 중복해서 편철해서 아주 무성의한 내용이 발견됐고 또 더 황당한 거는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다른 의원들의 재산 내용이 같이 첨부가 돼서 헛갈리게 제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보좌진들이 이상한 게 있어서 그 현장도 가 보고 따져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민주당 다른 의원의 재산이 여기 들어가 있고 심지어 그 당시 다른 당의 의원 재산 목록까지도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그거 하나 사례가……

이거 위원장님 보여 드릴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정성호 후보자의 재산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의 재산 목록을 이렇게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시켜서 보냈다는 거예요.

또 일 열심히 하는 우리 보좌진들이 이것을 뒤져 보고 막 해 보니까 의심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한남동의 고가 빌라를 매입했다든가 도로를 매입했다든가 투기 혐의가 막 뚜렷한, 그래서 현장 조사해 보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 명의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무성의한 인사요청안을 하고……

거기다가 또 후보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무슨 군사·외교·대북 기밀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자료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들의 군 휴가·외박 일수 또 증권 거래내역, 자동차 등록원부, 변호사 수임내역, 이런 건 명백한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제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제출한 것도 기한이 지나서

제출됐다는 거지요.

이렇게 인사청문요청안도 잘못되고 또 당사자의 자료제출도 엉터리, 무성의. 위원장님,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좀 강력하게 문제 제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정말 새 정부의 조각 장관후보자에 대한 요청안은 성의 있게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엄중 경고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춘석 예, 알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국민의힘 신동욱입니다.

후보자가 내신 답변을 저희가 받아 보니까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될 덕목 중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라는 부분을 폄하하셨더군요.

그리고 정성호 후보자님 몇 년 전에 인사청문위원장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국무위원후보자들은 국민에 대한 응대로 본인뿐 아니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족, 직계존비속들에 걸친 어려움 이런 부분들도 마땅히 감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김민석 총리후보자부터 시작해서 쪽 보니까 민주당의 일관된 일종의 청문회 전략이 자료를 내지 않는다 같아요. 그런데 다만 저는 정성호 후보자님의 평소 인품이나 또는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어도 후보자님만큼은 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셨으면,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말씀처럼 후보자 배우자님이 지난 10년 동안만 보더라도 거의 17억 원의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개인정보니까 제출할 수 없다……

이게 대개 ‘사업소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보니까 화가셔서 아마 그림을 판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일반인의 그림 판매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지역구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어디에 어떤 경위로 팔려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말씀하신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는 저는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작품 거래내역, 구매자, 세금 납부내역 이런 부분들을 좀 조속히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본인의 병역 기록도 개인정보 부동의 그리고 배우자분이나 직계존비속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개인정보 부동의를 사유로 해 가지고 지금 내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오영준 헌법재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병역이든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정보 동의를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

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동의를 하지 않는 거는 뭔가 밝히지 못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핵심적인 자료는 저희가 거의 못 받아서 일단은 배우자분의 그림 판매내역 이것도 꼭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석 또 자료제출 더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네 분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기관이 여러 개가 있어서 전부 취합이 안 된 상태에 있어서 한 1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총 자료와 도착한 자료의 통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취합이 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사청문회 준비팀 나와 계시지요, 법무부?

팀장이십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예, 나와 있습니다. 준비단장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아까 다 잘 메모하셨을 텐데 앉아서 한번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규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황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출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공문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3개 특검이 검찰청에 요구한 공문 사본, 이 부분은 특별히 제출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문 사본은 해당 검찰청에 연락하셔서 오늘 청문회 과정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배숙 위원님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소득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데 나머지는 말씀으로 하였고 지금 요구하신 부분은 2022년 소득증명서가 누락돼 있다 그렇게 하니까 2022년 소득증명 서류는 연락하셔서 제출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조배숙 위원 그 이외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제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춘석 아니, 구체적으로 아까 발언 취지를 꼭 종합해 보면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특정됐다고 보는 부분이고 더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서면을 작성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은 인사요청안과 당사자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을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준비팀에서 혹시 자료제출에 부족함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하면 저도 통계를 좀 보겠지만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신동욱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특정한 것은 혹시 배우자께서 작품 거래내역이 있다고 하면 그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현황이 다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자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준비해서 청문 과정 중에 제출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셔서 그 진행 상황 자체를, 오전 질의가 끝나고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부 여부를 알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을 한 건데요.

○위원장 이춘석 아니,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송석준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지적도 했고요. 예를 들면 증권 거래내역, 변호사 수입 내역, 아들 군 휴가·외박 일수……

○위원장 이춘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서류로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준비팀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는 직접 오늘 여기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준비하기는 어려울 거고 제가 준비팀에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 제출이 가능한 부분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 조배숙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법무부장관 지명을 축하합니다. 축하하고요.

지금만 다수당이 독점하는 국회에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격동의 시기인데 법무부장관으로서 중책을 맡아서 저는 어깨가 무거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은 사실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야당의 입장에서 좀 기대가 됩니다.

장관님…… 장관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후보님, 법무부장관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국가의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조배숙 위원 맞습니다. 법치주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지요.

PPT를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후보님이 6월 25일 날 서울대학교 송강포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공소취소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이 당시는 공직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이었고 또 공직후보자로 지명될 것을 예상도 못 한 상태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당시 특정 대학교 동문회의 친목 포럼에 가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플로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국민에 대한 공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로서 제 견해는 따로 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만 공소취소의 의미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면죄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 99%의 지지를 받아도 죄가 있으면 처벌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지금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 후보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보세요.

또다시 PPT 띄워 줘 보세요.

대통령선거 때 출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여론조사를 같이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63.9%가 재판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이게 국민의 뜻입니다.

그런데 배상윤이라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비리로 해외 도피 중이었는데 SBS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에게 아주 유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7월 7일 날 검찰 조작기소대응 TF를 띄웠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가 조작이라는 거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을 공소취소로 몰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해서는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난 것 아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조배숙 위원 저는 아주 똑똑히 기억합니다. 작년에 항소심 재판 중이던 이화영 피고인 여기에 불러내 가지고 일심 판결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국회 회의장을 완전히 이화영 변론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갖 시도를 했지만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유죄판결을 냈습니다.

검찰이 조작해서 기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합리적인 증거나 이런 판단을 해서 기소를 했던 것이고 법원은 일심, 이심, 삼심에서 유죄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되고 정치 공세로 뒤집을 수가 없고 뒤집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아니면 사법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법원에서 또 5월 1일 날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나왔을 때 온갖 압박을 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재판받아야 되는데 이게 다 추정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고.

또 제가 놀란 것은 7월 10일 날 법이 하나 발의가 됐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 아세요? 들어 보셨어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저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언론보도만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게 7월 10일 날 발의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위원회가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되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취소 조치를 건의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된다’. 결국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의 법적인 근거를 만든 거예요. 아니, 입법권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법안이 발의만 된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또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치적으로 오해받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에서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법안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금 국회 구조가 과반수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계속 통과입니

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이것을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그냥 묵인하신다면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 가지고 검찰 폐지하는 법안도 내고, 그 법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조배숙 위원** 1차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을 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이 지금 기형적인 구조를 맞았어요. 이 시행 결과 생각보다 부작용이 큼니다, 수사가 지연되고 피해자 보호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피의자가 활개 치는 피의자 천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수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검찰을 전제로 하는 헌법과도 맞지 않고 형사소송법 체계하고도 충돌돼요. 이런 개혁 시도나 검찰 폐지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 또 형의 집행까지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소하거나 수사했다는 이런 국민들의 의혹이, 의심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 한 집단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서 형사사법체계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소 관련해서는 이미 1954년의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04년도 노무현 정부 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진척이 없었습니다.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사개특위라든가 형사사법체계 조정을 위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이 됐지만 제대로 완결된 체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최종적으로 여야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저하되지 않게 또 범죄가 오히려 은폐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잘 협의하고, 저희들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여야 합의라고 하지만 여당은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박균택 위원** 능력, 인품 모든 것을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잘된 인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인사청문회가 없어도 되는 후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속 마음으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동의하는 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법에 정해진 절차니까 진행은 될 수밖에 없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법률적으로는 국회에서 지난번에 비상계엄이 해제된 시기가 사실은 계엄이 종료됐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어쨌든 내란에 관여한 분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란이 종료되었다, 종료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은 좀 설부른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저는 아직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을 상대로 어떤 정치사냥 수준의 표적수사를 벌였던 검사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당시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도 있고 내란 수괴 피의자를 석방할 때 거기에 동조했다는 검사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당시에 불법 비상계엄 선포된 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독방 현황을 확인했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저는 그걸 지금도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진상 확인이 안 되고 그 책임자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검이 윤석열 피의자를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휘를 했는데 서울구치소장이 지금 그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내란이 종결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임명되시면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징계 조치를 신속하게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검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보기에든 구체적인 또 실체적인 사실들이 확인된다고 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아마 최고의 과제일 걸로 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검찰청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시키는 것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고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이나 다름이 없고 민주 진영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마 장관님께서도 이걸 가장 역점을 뒀서 추진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검찰청이 직접수사권 폐지에 동의를 해 주면 좋을 텐데 이걸 사실상 반대를 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까지 거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굉장히 오만한 태도 아닙니까? 대통령의 공약, 정부의 공약도 거부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본인들이 직접수사권 폐지에 동의를 해야만 직접수사권이 폐지가 됐었을 때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로 이관되는 직접수사권, 경찰의 수사권이 남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남용의 문제 또 미흡한 수사에 대한 대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 대책이 논의가 될 텐데 직접수사권 폐지 자체를 거부하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제대로 제시되지도 않고 논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취임하시면 검찰로 하여금 여기

에 동의하는 태세로 나오도록 만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의견을, 보완 대책을 제시하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장관님 계획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현재 대검의 입장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모두인사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소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소의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 보호 그다음에 수사기관 간의 어떠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또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형태의 사법통제 이런 것들이 잘 고려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 있어서 여야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게 된다면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도 검찰이 관련 법에 의해 갖고서 부패·경제 범죄 이외는 수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시행령을 확대해 갖고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법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희생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또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는 조치는 꼭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액수가 재판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큼니다.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수천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지역에 따라서, 재판부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몇 배씩 차이가 나는 이 현상들을 해소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이런 요구를 했을 때 균형의 문제, 형평의 문제를 생각하겠다고 법원은 그런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저가의 판결금액이 확정돼 버린 이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구체화 주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제가 고민이 참 많은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한번 지혜로운 해법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공감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해당 사건의 피고가 국가이고 법무부가 소송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적절하게 법무부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한다 하면 국회와 논의해 갖고 다른 행정적인 결단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후보자님,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경질을 원하지 않는 국민이 다수인 것도 우리나라

가 특권층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누구에게나 공평히 해야 되기 때문인데 공감하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후보자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재판 진행 중인 것을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으니 공소취소가 맞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아까 특정 친목 포럼이었고 공직후보자 지명 전이니까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 해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요. 이 발언의 내용을 놓고 보면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된다는 발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정권 관련된 사람들이 공소취소되거나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법치주의에는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이고 또 이게 잘못하면 인민재판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있어서는 너무 낙후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얘기였고 그 당시 상황에서 헌법 84조 해석에 관련된 플로어의 질문이 있어 가지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주장을 말씀드렸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제가 법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미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는 일련의 사법체계의 변경 과정이 너무 급작스럽고 또 그렇다 보니까 국민 공감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나 이런 것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 재판과 연관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나자마자 대법관을 14명에서 갑자기 30명으로 증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는 법원에서조차 반대하고 있거든요. 또 지금 검찰청을 사실상 없애고 예를 들어서 보완수사조차 할 수 없게 만들면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도 새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검찰의 기소가 적정했는지를 또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그 외에 인사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이 민정라인과 법해석을 총괄하는 법제처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또 후보자께서도 38년 지기로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작기소대응 TF까지 만들어서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만약에 기소가 잘못됐으면 법원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바로잡아지는 것이지 어떤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 판단도 받기 전에 알아서 특정인의 공소를 취소한다면 이것은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너무 부당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우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큰 차원에서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된다고 하는 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갑자기 드러난 건 아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건지, 중수청을 설치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에 입법적인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검찰에 대한 불신은 사건 건수로 따지면……

○**주진우 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국민 피해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었고 공수처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의 실적이나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지금 마약 관련해서 범죄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수사 사건의 처리되는 기한이 다 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법률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수사제도를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고친 것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게, 국민이 더 편안해졌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닙니다. 전 정부의 수사구조 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 관련해서 제가 평가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사 지연의 문제들 이런 점들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진우 위원** 예, 좋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관련해서 또……

○**주진우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결국 대통령의 재판 문제는 이해충돌이 너무나 직접적이고 또 사면 문제나 이런 것들도 보면 후보자 본인도 예전에 좀 알던 분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나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인 이해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

법안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특별법안 같은 건 너무 심해요. 7월 10일 자 발의했는데, 민형배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했는데 보면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돼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면을 건의할 수 있고 공소취소도 건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너무 정파적이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 확정돼도 그 위원회가 어떤 정당성이 있어서 어떤 법치주의에서 어떤 위치를 갈음하길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다 이미 결론까지 내고 재심 절차도 남아 있는데 그런 것 다 뛰어넘고 본인들이 공소취소랑 사면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법무부장관으로서 그런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법안들이 있을 때 법률안 거부권을 제대로 건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의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공소취소가 일반 국민에는 연간 몇 건 정도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극히 예외적이어서 가지고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몇 건밖에 되지 않고요. 진범이 잡히거나, 그것도 굉장히 드뭅니다. 실질적으로는 뭔가 공소시효를 놓쳤거나 너무나 형식적으로 명백한 과오인 경우에 철회하고 나머지 공소권의 남용은 전부 다, 일단 기소된 이상 공평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거쳐서 공소권 오남용에 대한 판단을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공소취소와 관련된 입법에 대해서 좀 제대로 견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박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저인가요?

○**위원장 이춘석** 예, 다음 순서 민주당 위원님이 안 계셔서.

○**곽규택 위원** 예.

장관후보자님, 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감사합니다.

○**곽규택 위원** 후보자님에 대한 기사 검색을 하면 제일 앞에 무슨 호처럼 붙는 말이 있어요, ‘친명좌장’. 많이 보셨지요, 친명좌장?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곽규택 위원** 이런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제가 가장 듣기 거북해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서도 저는 친명좌장이고 좌장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요. 또 그런 역할을 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곽규택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대통령과 후보자님의 관계를 보면 정말 친명좌장이신 것 같아요. 현 대통령이 예전에 구속된 적이 있었어요. 성남 파크뷰 사건 관련해 가지고 검사 사칭하고 이러다가 구속된 적이 있는데 그 사건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때 혹시 변론을 하셨나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변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뭐 법률적인 조언을 해 주셨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게 언론에 보도가 났더라고요.

그러면 공식적인 변호인은 아니셨고.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전화가 와 갖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걸 대화한 기억이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 내에서 대선후보로 나왔던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전에 두 번 나왔을 때는 소수파였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곽규택 위원** 그때 선대위에서 역할을 크게 하신 건 맞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 과거의 친분 또 당에서의 역할 이런 것 때문에 친명좌장이라는 호칭이 붙은 것 같은데,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의 후보자님 앞에 친명좌장은 더 이상 붙여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보면 일국의 법질서를 책임지는 최고의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정치적 중립 이런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곽규택 위원** 통상 과거부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받으신 분이 인사말씀 하실 때 법질서 확립, 정치적 중립, 이 두 가지는 정말 최고의 철칙으로 법무부에서 인사말씀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법질서 확립 이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뚜렷한 의지는 인사말씀에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몇몇 위원분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법무부장관후보 지명되시기 직전에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다시 질문을 드리니까 ‘공소취소라는 그 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리에서 본인이 법무부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대통령에 대한 기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분명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저는 정치를 해 오면서 어떤 특정 정파에 속해 갖고 정파적인 활동을 해 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서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오늘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후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거라는 다짐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소취소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공소취소는 해당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 갖고 결정으로 나는 거지만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 갖고서…… 저는 평상시에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가 구체적 또는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거의 없을 거다가 아니라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후보자님,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제일 중요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곽규택 위원**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곽규택 위원** 유독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행사됐던 것이, 민주당 정권하에서 법무부장관들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 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런 전례를 봤을 때 후보자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거기에 더해서 지금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해서 징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최근에 법이 개정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렇지요? 검사에 대해서 인사를 할 수가 있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사건 지휘를 할 수가 있고 이제는 검사 징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된 대북송금 사건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기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 확정됐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대통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될 우려가 굉장히 높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여론이—국회의원의 입을 통한 여론이겠지요—그런 여론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취소해야 된다 이런 여론을 막 일으킨 다음에 거기에 미온적인 검사들에 대해서 인사하고 징계 청구하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사건 지휘해 가지고 공소취소하게 하고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께서 그전에 한 말은, 정치인으로서 ‘공소취소가 적절하다’ 이런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한 말이고 장관으로서는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는 수준이 아니고 기준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 없다, 공소취소하지 않겠다 이런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어쨌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사건인데 개별 사건의 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해당 사건을 수사하거나 또는 공소유지하고 있는 검사와 관련해 갖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러한 상황으로 징계를 한다거나 어떤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저는 전혀 없고요. 위원님들이 절대 우려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 아까 들으셨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곽규택 위원**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마는 그 자료 반드시 오늘 중에,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법무부장관님 내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감사합니다.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서영교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 검사는 으레 기소하면 되니까 무죄 나도 그냥 놔두나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무죄와 관련해 갖고 평정을 하고 인사에도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평정하고 인사에 반영해야지요. 특히나 정치적 기소를 했어요. 우리가 검찰개혁 하는 이유가 뭐니까? 수사도 자기가 하고 억박지르고 뽕뽕 말아 기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소유지도 자기네가 하고 그러고 끝내 무죄 받았어요. 무죄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소위 말하는 특수 사건들 또 정치인 관련 사건들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함에 있어서 유죄에 확신이 들고 그에 합당한 증거들이 확보되어야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죄 확신도 부족하고 증거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가서 판단해라, 무죄 나와도 모르는 척하는 이런 행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건을 지휘한 검사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검찰개혁이 왜 나오고…… 윤석열이 검사 하다가 검찰총장 돼서 대한민국이 전쟁의 위기까지 가서 이제 내란 우두머리가 되어서 최소 무기징역인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기 멋대로 기소하고 정치적으로 기소하고, 이런 검찰 저는 다 책임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 보복이었느니 뭐니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막아 줘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윤석열이 아이폰, 윤석열이 핸드폰으로, 비화폰으로 온갖 범죄를 저질렀어요. 윤석열과 같이 공동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아주 많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윤석열이 아이폰 비밀번호 내주지 않아요. 한동훈도 아이폰 비밀번호 안 내줬어요. 손준성도 아이폰 비밀번호 안 내줬어요. 임성근은 자기 아이폰 비밀번호를 모른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일국의 대통령께서 이런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헌법질서를 흔드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소신에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신에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한, 대한민국의 아주 수치와 치욕이지요. 그러면 기술력만 이야기할 때인가? 저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손준성, 임성근, 윤석열 그리고 계속 아이폰 관련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아이폰이라고 해서, 범죄자가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비밀번호를 안 알려 준다? 그러면 저는 추가 기소하고 추가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그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도 법적으로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의 지적도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입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는 법안을 낸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아이폰이라 그리고 비밀번호 없다 그러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것 추가해서, 이것을 범죄자가 내놓지 않을 때는 정말 최대 처벌형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참 부창부수예요. 대한민국 다 망가뜨린 사람이 김건희인데요. 김건희의 집사 김예성이라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 사진 있습니까? 올려 주십시오.

집사 게이트 김예성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저 사람 헌병대 수사관, 서울대 EMBA…… 그래서 여기서 김건희를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를 만났고.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이 사람이 하는 회사에 투자한 회사들을 한번 올려 봐 주세요.

이 사람 김예성 회사에 카카오모빌리티 30억 투자, 효성 35억, 한국증권금융 50억, 신한은행 30억, 키움증권 10억, 다른 데까지 다 해서 184억을 저 사람 회사에 투자했답니다.

김건희의 집사랍니다. 최은순 잔고 위조할 때 그것 같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관련해서 압수수색영장 그리고 이것을 구속영장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어요. 법원이 기각할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 보니까 특검의 수사 내용이 아니라고 한답니다. 이 특검법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대표발의했는데, 집사 게이트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해요.

법원 오늘 똑똑히 들어 두셔야 됩니다. 이 특검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모두 다 수사할 수 있게 특검 범주에 들어 있습니다. 특검 수사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서영교 위원 수사 과정 속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김건희 특검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그랬고 모든 특검법에 수사 과정 속에서 인지된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원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기각했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국민이 보고 있을 텐데, 법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건진법사 게이트 전성배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법원에 지귀연과 같은 또 조희대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나 오늘 이 자리를 보고 있는 국민들께 모두 낱낱이 공개적으로 고발합니다.

법원, 다시 또 한 번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앞으로 넘겨 주면……

김예성, 김건희의 집사예요. 집사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카카오모빌리티 김범수가 왜 여기다가 30억을 투자합니까?

저는 이런 법적 문제점이 있는, 도대체 얼마나 어디까지 해 먹었는지 다시 마약 관련해서도 질의하게 될 텐데요 대한민국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신동욱 위원 인사청문회 합시다, 인사청문회.

○서영교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시 낱낱이 살펴보실 것을 법무부장관 내정자에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춘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어쨌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공직후보자가 당부를 말씀드

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특검 수사의 범위가 어디인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의 범위가 어디인지 이것에 대한 해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발언시간 내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고 어느 부분에 해당되고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서로의 발언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그 대신 시간은 위원장으로서 엄격히 지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후보자님, 법무부장관후보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감사합니다.

○박은정 위원 후보자도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는데 취임 후에 수행할 과제가 검찰개혁 입법이 있을 것인데요.

화면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후보자님께서 아마,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이 개혁 입법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 이런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진우 위원 질의에서도 검찰개혁 입법,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동안 검찰이,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반대 논리와 매우 똑같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으로 나뉘고 공소청에 있는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인데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확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국민적 요청이라고 믿고 있고요.

다만 공소청과 중수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수청을 어디에 뒀다 되느냐의 문제, 그 과정에서……

○박은정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찬성하시는 것인지 묻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내용이,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 이것이 보완수사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박은정 위원 그렇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후보자의 입장을 묻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직은 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건지……

○**박은정 위원** 보완수사요구권은 공소청법에 있습니다. 공소청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것은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는 것인지, 지금 후보자의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민생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취지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직은 제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 현재 민생범죄 수사는 경찰에서 90% 이상 합니다. 후보자께서 민생범죄 대응 역량 약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검사들의 논리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개혁 입법에 대해서 지금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실질적인 입법의 로드맵 관련해서 언제까지 완수하실 것인가요? 언제까지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어쨌든 관련 입법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박은정 위원** 후보자의 입장을 묻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저는 그렇습니다. 가능한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04년도 노무현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불완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빨리 완결되어야 되고, 이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더 지체한다고 하면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박은정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추석 전에 열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9월이면 이 개혁 입법이 통과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에서 찬성하실 건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대통령께서 열개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그 열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상황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출된 법안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소위에 회부된다고 하면, 1회 공청회를 하셨지만 계속 공청회도 하고 또 관련자들 청문회도 해 가지고 정말 일주일에 밤새서 4~5회 해 가지고 조문 하나하나 축조심의하면서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하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후보자께서 2016년도 법무부 탈검찰화 입법을 발의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현재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같은 입장입니다.

○박은정 위원 현재 법무부에 검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탈검찰화가 역행이 됐습니다. 모든 주요 요직에 검사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검사가 독식할 경우에는 법무부가 검찰에 종속된다, 그런 취지로 과거에 대표 입법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을 하시면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을 하셔야 될 건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사들이 지금 현재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에 대해서 법률이나 시행령에 이미 비검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심 실국장과 과장들에 대해서 전부 다 검찰로 되돌리고 비검사로 임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직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어쨌든 바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법무부의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검사들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 이런 점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법무부와 검찰이 일체화 돼 가지고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구조는 꼭 탈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검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요직에 검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검사들의 논리입니다. 그것이 탈검찰하고는 배치되는 의견이거든요.

법무부 탈검찰화는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지 않도록,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활용해서, 이미 법률과 시행령에 비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의 말씀과 또 지적 염두에 두고 저희가 잘 검토해 가지고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리고 후보자께서 지금 시급하게 하셔야 될 게 오늘 윤석열 내란 수괴 피고인에 대해서 내란 특검에서 강제구인을 하는데 법무부에 있는 교정본부장 그리고 서울구치소장이 강제구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잡범보다도 못한 내란 수괴 피고인의 강제구인, 내란 특검의 조사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혹시 임명이 된다고 하면 특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우선 축하드립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감사합니다.

○김기표 위원 저도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역설적으로 굉장

히 잘된 인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질문 전에도 저는 잘된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공소취소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상대 당 위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형사소추 면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설에도 예를 들어서 공판절차가 정지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공소가 취소돼야 된다든지 이런 논의는 활발하지요.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공소취소를 아예 해 버릴 것이냐, 아니면 재판을 정지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의견을 표명하신 거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김기표 위원** 물론 그때는 후보자 되기 전의 의견이라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법안 발의를 가지고, 위원회의 설립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이제 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법안 발의를 가지고 그렇게 선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선동 내지 건강부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법안 논의의 주체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야 간에 열린 자세로 또 합리적으로 논의해 주면 저희들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후보자로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상대 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는데, 후보자님은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실제로 제가 보기에든 검찰이 전 정권에 있어서 그렇게 표적수사를 하고 정적 죽이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의 가장 요체는 뭐냐 하면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면서 그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지난 정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특정인을 찍어서 하는 수사가 횡행했습니다. 그 어느 정권보다도 검찰권이 완전히 정치권에 부역하는 역할을 했던, 아주 그냥 검찰 역사에 있어서는 흑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대전제로 해 가지고 사건을 꿰 맞추다 보면 당연히 수사가 무리하게 되고 조작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전 정권의 주도하에 검찰이 거기에 부역해서, 이른바 부역해서 하는 수사라고 하면 억울하게 수사를 당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편을 들어 주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 허위의 진술로써 온갖 수사에 협조하는 듯한 행태를 취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일이 횡행했기 때문에 조작수사가 그만큼 위험한 것 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본인이 유리하게 얘기를 하면,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얘기를 해 주면 자기 자신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고 처벌을 작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검찰에 허위 진술을 합니다. 검찰은 그 진술만을 가지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 예컨대 안부수가 거기에 나타나지도 않았더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에 만에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배척해 버리고 그 허위 진술을 믿어 버리는 상황, 그런데 재판이 결국…… 우리나라 사법부가 현실적으로 그걸 과연 견제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현실하에서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이루어졌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배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전 정권의 수사가 전혀 잘못됐다는 것이 명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김용 전 부원장 사건 같은 경우가, 실제 관계는 그렇습니다. 유동규라는 사람이 자금을 마련해 준, 그 전 사람으로부터, 남욱이라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것을 김용에게 전달하고, 아마 검찰은 김용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갔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재판에 참여해 본 입장으로서는 남욱으로부터 유동규까지 간 증거는 굉장히 차고 넘쳐요. 기록 자체가 거의 90%에 이를 정도로 그 기록, 그거에 대한 입증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받아서 유동규가 김용에게 줬느냐가 핵심이 되는 사건인데 그 다리를 건너가는 어떤 입증되는 자료는 유동규가 줬다고 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항소심에서는 유동규가 그렇게 줬다고 하는 그 날짜에, 구글 타임라인에 그날 김용이 그 장소, 그 시간에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유동규가 줬다고 하는 그 말 하나에 의지해서 기소를 했고, 법원은 지금 항소심에서까지 구글 타임라인, 다른 데서 다 객관적인 증거로 쓰이고 있는 것을 아무 근거도 없이, 별다른 입장 설명도 없이 증명력을 낮게 인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장관으로서는……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점의 이런 사건들, 명백하게 조작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공소취소 얘기했는데 저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조작된 사건, 정적 죽이기로 시작된 사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검찰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객관적으로 증거 조작이라든가 증인의 진술을 강요해 갖고 사건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감찰을 통해 갖고 실제적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면 적절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기표 위원** 그리고 그런 책임을 묻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 같이 고민해 주시라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감사합니다.

○**박준태 위원** 법무부장관이 만약에 되신다면 피해자가 있는 범죄, 강력범죄들이지요. 테이트 폭력이나 또 마약 사건이나 그리고 상해를 입히거나 또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반드시 엄벌주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법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제공받은 인사청문회 자료 중에 보니까요 2010년 10월에 사인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5억 원을 흥 모 씨한테 빌려주셨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박준태 위원** 이 차용증 보니까 채무액을 5억 원으로 두고 연이율 5%로 대여해 가지고 이자를 매년 10월 말에 정산을 하고 원금은 2020년 10월 31일까지 변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5억을 10년 빌려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5% 이자를 1년에 한 번씩 10월에 받기로 한 겁니다. 1년에 25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

다음 장 보시지요.

재산공개 자료 보니까 변제일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이 5억 원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차용증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변제받지 못한 것은 맞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초 대여한 금액에서 2006년경 한 1억 정도를 변제받았고요, 그 후에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5억 중에 1억은 변제받고 4억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게 원리금 합쳐 가지고 한 2010년도경…… 이 차용증도 2012년도에 국회의원 다시 들어오면서 재산 신고할 때 그 전후 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채무 존재, 채권·채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에서 쓴 겁니다.

○**박준태 위원** 이자는 제대로 지급을 받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원리금이 장기간 동안 미지급되면 채권추심이나 아니면 법적조치나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조치를 취하신 적은 없잖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친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좀 부끄럽습니다.

○**박준태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여쭙보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친족한테 이 돈을 빌려주었다 이런 거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런데 이자는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박준태 위원** 그런데 이게 14년 동안 변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자만 따져도 한 3억 50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지연이자 같은 것은 계산을 안 한 겁니다.

근 10억 가까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결국은 변제 능력이 거의 없는 분한테, 이자율 5%면 시중금리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데 이거를 그냥 차용증만 작성해 놓고서는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 차용증 형식으로 그냥 빌려 준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편법으로 증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어쨌든 돈을 주려면 그에 합당한 증여세를 내고 정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최초 대여 일시는 90년대 중후반 정도였습니다.

○**박준태 위원** 90년대 중후반.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사실은 그게 2004년도에 발생한 게 아니고요, 그전에 발생했던 거고. 제가 초선 때 정치를 하면서 일부 변제를 받긴 했었는데, 차라리 증여를 했다고 하면 제가 이것을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덮어 두고 있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는 채권·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을 하면서 최초 신고를 했었고, 이게 실질적인 변제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번 신고를 해 놓으니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국회의원 하면서 매년 재산 신고할 때 계속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박준태 위원** 어쨌든 지금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받을 의사도 없으시다면 이거는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증여 처리해서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채권을 포기하게 되면 증여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돈도 받지 못하는데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박준태 위원**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이 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정리를 못 한다는 말씀은 좀 와닿지가 않네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30년이 다 돼 가는데 이게 친족 간의 문제여 가지고 사실상 포기한 채권이고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박준태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많이 나왔던 얘지요. 후보자께서 22년도에 대장동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수감돼 있는 대통령 측근이자 또 사건 관계인인 김용·정진상 씨 면회를 가셨어요. 언론에 알려진 내용은 이겁니다. ‘흔들리지 말라,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알리바이 잘 만들어라’ 이런 말씀 하셨던 기억이 남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맞습니다.

○**박준태 위원**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셨고.

그런데 이 발언만 보면 증인들을 회유하기 위한 시도다,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일단 그렇게 오해받을 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을 장소변경접견 하게 된 것은 기소된 이후, 한 한 달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면회를 안 갔다고 해서 저는 위로차 갔던 겁니다. 다만 이분들하고 저는 그 이전부터 잘 아는 관계였기 때문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또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니까 무죄를 주장하려고 하면 현장부재증명,

알리바이가 있어야 된다, 잘 기억해서 이런 거 잘해라. 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언젠가 대통령 되지 않겠느냐, 잘 참고 있어라 이런 위로의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만약 일부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였다고 하면, 그 옆에 교도관이 있는 데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전체 얘기의 일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당 시도……

○박준태 위원 그 정도 듣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 주시지요. 그다음 장으로 가시지요.

지금 공소취소 부분이 앞에도 계속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이게 공직 후보자 전의 일이었다고 여러 가지 포럼에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한 거다, 정치인으로서의 발언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후보자께서 내신 답변서를 보면 ‘검찰에 공소취소 등 특별한 소송행위를 지휘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입장은 정확한 입장인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정확한 입장입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라도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의원 활동을 해 왔고요.

○박준태 위원 그러면 그런 지휘를 하실 의도는 없지만 검사가 공소취소를 하면 그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지금 이런 입장하신 건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해당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기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장관후보자님, 먼저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국민주권정부 첫 내각 일원으로 뒀으니까 이전의 장관들보다는 훨씬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서 포부를 밝히시는 것 보니까 단단한 각오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국민들도 되게 든든해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방금 어떤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업무 수행 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렇게 물으시니까 장관님이 ‘국가의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헌법질서 유지, 민주주의·법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위해 가장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일단은 우리 헌법질서가 지난해 12월 3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갖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특검과 또 여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또 이후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건들이 적절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후보자님, 지난 2015년에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내란 예비·음모—형법 90조입니다—이걸로 기소돼서 최종적으로 징역 9년을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이성윤 위원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이 지역당 비공개 정세 강연회에서 이런 내란 논의·예비·음모만 했다는 이유로 해산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이석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형사처벌만으로는 위헌성과 위험성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통진당 자체를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헌법 제8조 4항이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는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이성윤 위원 국힘 1호 당원 윤석열이 내란 예비·음모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불법계엄을 일으켜서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이성윤 위원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요.

윤석열 공소장 혹시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정확히는 보지를 았고 대충 봤습니다.

○이성윤 위원 공소장 보면 내란을 일으키기 전부터 국방부장관이나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모여서 수차례나, 무려 열 차례가 넘게 내란에 대해, 불법계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실제로 또 내란을,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대를 국회하고 또 선관위원회에 보내 가지고 국가기관·헌법기관 탈취를 시도했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이성윤 위원 또 불법계엄 후에, 최근에 밝혀진 일이긴 하지만 계엄 요건, 국무회의의 절차상 하자를 메꾼답시고 사후에 문서를 조작하게 한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국힘은 또 어떻습니까? 내란 당일에 많은 의원들이 수시로 윤석열과 통화를 했고 또 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모이는 걸 방해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어쨌든 뭐……

○이성윤 위원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셨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이성윤 위원 또한 윤석열 탄핵 의결에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불참해서 탄핵이 불성립된 적 있지요?

그리고 윤석열을 체포하려고 하자 국힘 의원 45명이 용산에 모여서 인간 띠로 그 집행을 방해하려고 한 적도 있었고 또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침입하려고 선동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 의원은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헌재를 쳐부숴라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의 활동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이성윤 위원** 심지어 자신들이 내란의 피해자라고까지 말합니다. 통진당 사건 현재 판결문을 보면 소속 의원들, 당원들의 이런 회합, 논의를 정당 전체의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이럴 때, 지금 말씀드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재판받고 있고 1호 당원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국힘 전체의 활동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지금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판이 확정되겠지요. 저는 윤석열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진당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국힘도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해산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제소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그러니까 주체가 정당입니다. 그래서 소속 구성원들의 활동을 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는 없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쨌든 헌법 절차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런데 방금 통진당 판결문을 보시면 이러한 통진당 소속 의원과 당원들의 활동을 통진당 전체의 활동으로 봤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이성윤 위원** 지금 내란이 끝나지 않았습시다. 내란을 종식해야 민생 회복도 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내란 정당 국힘에 대해서……

○**신동욱 위원** 말조심하세요. 무슨 내란 정당입니까?

○**이성윤 위원** 해산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장관에 취임하면 해산을 청구, 신청할 의사가 있습니까?

(장내 소란)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정했습니다, 내란을 했다고.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지금 대한민국은 정당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쨌든 사법절차에 의해서 판단돼야 될 문제고 공직후보자가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지금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1분짜리 의사진행발언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춘석** 어차피 질의사항에도 포함되는 내용 아닙니까?

○**김용민 위원** 주지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이것 딱 한마디만, 제 질의와 관계없는 것……

○위원장 이춘석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송석준 위원 예, 1분, 30초만 할게요.

○위원장 이춘석 실제로 내용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는 게 아니라?

○송석준 위원 아니에요. 30초, 30초만 할게요.

○김용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질의하게 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제가 그냥 구두로 하고 싶은데 그래도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위원장님과 달리 의사진행발언 필요할 때는 주시기 때문에 제가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석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제한하지는 않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예, 30초만.

○위원장 이춘석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 해서 실제로 그 내용이 아니라 내용 중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딱 1분만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이성운 위원님 질의 중에 내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밖에서는 정치적인 공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엄정하게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이제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법사위 아닙니까? 그래서 내란이라는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고, 확정적인 표현…… 그리고 또 동료 위원이나 동료 정당에 내란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심각한 모독이고 이것은 정말 법사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들 사이에 서로 공감할 수 없는 표현은 좀 자제하도록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는 것은 사실 위원님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판단하시기에는 내란 정당이라는 것이 거북스러울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제지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면 반론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쓰거나 이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제지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방금 주장하신 것에 하나 사실관계 틀린 게 있어서 반론을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명확하게 틀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1분만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송석준 위원께서는 예전에 통합진보당 해산이 마치 내란 사건이 확정된 뒤에 해산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잘못 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대법원에서 내란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해산됐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날 해산됐고 대법원 확정판결은 2015년 1월 22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해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면 또 논쟁이 되기 때문에 주질의 송석준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성호 후보자님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동료 위원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여야 관계에도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자료를 보니까 후보자님이 과거에 겸직 관련한 규정 국회법 개정 전후해서 겸직했던 사실이 있지요, 2014년도 당시에?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국회법 개정 전까지는 여러 가지, 여러 건으로 겸직했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겸직금지 규정을 두면서…… 그 당시에 겸직했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시지요, 2014년도에?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 당시 영리업무, 비영리업무 포함해 갖고 제가 겸직하고 있던 게 한 10개 이상 됐었을 겁니다. 그래 갖고서 다 일괄적으로 국회에 심사를…… 제출했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겸직금지의 경우에 우리가 2014년도 2월부터 금지 대상 중에는……

그 당시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연천군청 그리고 또 동두천시청 고문변호사직을 수행했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국회법 개정 내용에 의하면 부칙 규정에 의해서 3개월 이후에는 계속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래서 겸직금지할 때 여기 위원님 PPT에도 나오는 것처럼 영리 종사 금지는 6개월 이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기도교육청, 동두천시청, 연천군청은 제가 고문료를 받고 또 사건도 수임했기 때문에 영리업무였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제가 다 휴업을 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것을 영리업무로 보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래서 겸직금지 허용 신청은 무보수 명예직은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무보수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고 평가를 받았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게 영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6개월 안에 다 정리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고문변호사직은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해서 영리 활동으로 하는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래서 신고도 겸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닙니다. 그건 다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영리로 했었기 때문에, 사건을 수임했기 때문에 영리업무 아니겠습니까? 영리업무였기 때문에 영리

업무 금지 기간 그 유예기간 안에 이걸 정리했던 거고요.

그 당시 겸직허가 여부는 이것을 영리업무로 안 하고 무보수로 그냥 고문변호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에 대한 의뢰를 했던 겁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당시에 분명히 본인이 신청한 내용을 보면, 국회에도 그렇고, 국회에서의 지금 답변 자료에도 의하면 분명히 세 직을, 고문직을 수행한 것은 영리행위로서가 아니라 고문, 그러니까 본인도 겸직으로서 그렇게 문의를 했고 국회사무처에서도 겸직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러니까 일단은……

○**송석준 위원** 그런데 겸직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국회법 부칙 조항에 의해서 명백하게 3개월 안에 사직을 해야 되는데 사직을 안 하고 2개월간 초과해서 대가를 받았단 말이지요, 보수를. 이건 명백한 법률 위반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 이게 약간 오해가……

저희들이 초기에 설명을 잘못 드렸던 것 같은데 영리업무였기 때문에, 고문료를 받고 사건을 수임하는 그런 고문변호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리업무였기 때문에 시행 후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정리하기로 했던 거고.

그러나 겸직금지가 있으니까 영리업무 말고 비영리업무에 대해서 허용하느냐 이게, 겸직금지에서 비영리업무에 대해서 허용할 거냐 불가할 거냐 했을 때 무보수 명예직은 가능하니까 이걸 갖다가 돈을 안 받고, 돈을 받지 않고 고문료를 받지 않고 그냥 고문변호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걸 저희들이 자문했던 겁니다.

○**송석준 위원** 자문했더니……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것도 안 된다.

○**송석준 위원** 그것도 안 된다, 그런데 왜 그만두시지 않았어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하지만 영리업무였기 때문이에요, 이건.

○**송석준 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니요. 문제가 아니라고 위원님, 이게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게요……

○**송석준 위원** 그러면 깔끔하게…… 돈이 그렇게, 영업행위를 꼭 굳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어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니요. 위원님, 이게 이때만 한 게 아니라……

○**송석준 위원**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십만 원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국회사무처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직을 수행하신 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영리업무였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정리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정리를 하려고 했었던 거고.

○**송석준 위원** 그렇지만 즉각 그만둘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걸 통보해 갖고 위촉 절차를 밟았는데 절차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대개 한 7월 정도……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겸직이나, 영리행위나 이건 분명히 다르잖아요, 성격이. 그러면 그 자잘한 것 과감하게 던지면 될 걸, 굳이 그 직을 몇 개월을 어겨 가면서 영업행위를

주장하면서 하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 이게 더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이게 어쨌든 영리 목적의 겸직이었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법에 의해서 금지됐기 때문에 6월 안에 하던 되는 건데 그렇게 절차를 밟았던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국회에 문의했던 것은 이것을 영리 목적이 아니라 무보수 명예직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무보수로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렇지요. 그러니까……

○**송석준 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뒀으면 되는데 그걸 왜 계속 유지하세요?

○**박지원 위원** 예전에는 국회의원이 변호사로 개업했어요.

○**송석준 위원** 아이, 질의 중인데 좀……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니, 그래서 위원님 그게……

○**송석준 위원** 그런데 윤리특위 위원직을 또 맡고 계셨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윤리위원직을 맡고 계시면 겸직이든 영업행위든 이런 행위를 갖다가 굳이 왜,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도 그걸 굳이 그 기간을 초과해서 위법성의 의문이 있는 행위를 계속하고자 했어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안에만 정리하면 됐기 때문에요 6개월 내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어디에도, 우리 의원실에서 알아보니까 영업행위였다고 주장을 하지 않으셨어요. 겸직……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니, 어차피 그게 그 전까지 비용을 받고 고문변호사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영리업무였기 때문에 당연히 6개월 안에만 정리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걸 했느냐 하면……

○**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어디에도, 국회사무처의 답변이나……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이걸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제가.

○**송석준 위원**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래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겸직이 가능하냐 이걸 문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된다, 무보수 명예직도. 그래서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의정부 YMCA 이사, 양주 YMCA 이사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한속기협회 회장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다 금지된다고 해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해촉을 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나중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듣고 계신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소지가 있고요, 사실은. 송석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이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이게 유예기간 6개월을 뒀다는 거지요, 그 당시에 법상?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위원장 이춘석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사퇴를 하고 영리행위를 그만두면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그런데 그때는 내부적인 사정이나 이게 있어서, 곧바로 그만둘 수도 있지만 6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그만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위원장 이춘석 그런데 송석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비춰 보면 왜 6개월을 하냐, 바로 그만두면 되지 이런 질의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문을 할 때 바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거고 6개월 유예기간은 다 준수했다는 거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위반된 부분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위원장 이춘석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신동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에……

○신동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평소 존경합니다만 오늘 이 청문회 진행은 굉장히 편파적이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문제 제기를 해도 저희 당 쪽에서 문제 제기하면 다른 위원의 발언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반대의 경우에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지금 이 경우에는 명백하게 질의에 끼어드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후보자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을 못 하셨다고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그걸 정리까지 해 가지고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해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다음 답변시간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후보자가 다 답변을 못 하면 위원장님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정리하실 겁니까?

그것 좀 질문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석 아니, 잠깐만요.

신동욱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끼어들어서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후보자의 질의 내용 답변 내용이…… 제가 후보자를 위해서 발언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질의의 취지와 답변의 취지가 전혀 맞지 않고, 사실은 질의하시는 부분과 답변하는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생중계되고 국민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정리를 한 것이지 후보자를 두둔하거나 옹호하려고 제가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욱 위원 후보자가 제대로 답변을 못 한 것도 후보자님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그걸 왜 위원장님이 하세요?

○위원장 이춘석 아니지요. 그건 후보자는 정상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김기표 위원 답변을 제대로 못 한 게 아니고요 질의가 좀 꼬였어요.

○위원장 이춘석 질의자께서 그 답변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봐서 혼선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신동욱 위원 아니, 그 부분은 국민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요.

○송석준 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한 건 맞지요.

○김용민 위원 질문을 잘해야지요.

○박지원 위원 저도 발언권 좀 주세요.

○신동욱 위원 아니,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송석준 위원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할 말이 더 많아요.

○박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춘석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 정도 선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한 거고 그 정도의 의사진행발언이라든가, 위원장로서는 권한 범위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위원장, 야당 쫓으면 여당도 1분을 줘야지.

○송석준 위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춘석 아니, 취지의 답변이 다르다는 거지요.

○송석준 위원 본질의를 그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위원장님이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춘석 아니요. 저는 절대 무시한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박준태 위원 질의가 잘못된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성윤 위원 우리도 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형평성 맞게 해야지. 저쪽 쫓으면 여기도 줘야지.

○신동욱 위원 질문을 잘못했다는 게 무슨 말……

○송석준 위원 어떻게 이렇게 동료 위원의 질의를……

○이성윤 위원 박지원 위원님도 발언 기회 주세요.

○박희승 위원 박지원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 이춘석 제가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과 박지원 위원님한테만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송석준 위원님이 질의를 잘못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송석준 위원님의 질의 취지와 후보자의 답변 취지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혼선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정리해 주는 의미로 개입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송석준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잘못됐다 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그러면 먼저 송석준 위원님 1분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박지원 위원님 1분간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고맙습니다.

후보자님, 분명히 그러면 겸직이 아니고, 겸직은 분명히……

○**김기표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을 향해서 해야 돼요.

○**김용민 위원** 왜 갑자기 질의를 합니까?

○**송석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뭔가 오해된 부분을 1분 동안 말씀하시라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춘석** 예, 말씀하시고……

○**송석준 위원** 서로 소통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춘석** 아니, 후보자한테 묻지는 마시고 그냥 말씀을 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이춘석** 예, 후보자에게 질의는 할 수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은 당시 겸직금지 규정이 들어가고 그것을 부칙에 규정해 놓은 사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본인은 그 3개 기관에 고문변호사로 있던 것을 겸직이 아니고, 저는 겸직이라고 주변 모든 상황에서 파악을 해서 잘못됐다고 본 건데 본인은 겸직이 아니고 영리 그런 행위로 봐서 그거는 6개월간 유예가 가능하다고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윤리위원을 이분이 또 하셨단 말이지요. 국회 윤리위원을 하면서 영리 행위를 한 거는 또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지금 따지려고 하는데, 본인은 계속 영리행위였다고만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걸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국민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고.

박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송석준 위원의 질문도 옳고 정성호 장관후보자의 답변도 옳고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정리도 옳아요.

과거에 법사위원도 국회의원도 심지어 변호사를 개업해서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겸직금지 조항이 생겼고 그 겸직금지를 하면서 6개월간 유예 조치를 준 거예요. 저도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이런 것들을 겸직하고 있었지만 그게 영리행위가 아니면 괜찮다 하는 것까지도 정리가 됐는데, 정성호 장관후보자는 6개월 내로 전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후보자님, 장관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감사합니다.

○**장경태 위원** 작년에 제가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으로서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요. 지금 2023년도 특경비 446억 중 5억 8000만 원, 1.25%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

출되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권 이렇게 무시돼도 됩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법무부도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가지고 특별히 기밀성을 유지해야 될 사항이 아닌 한 가능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기밀성 유지할 사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올해 1차 추경에서 506억의 특경비가 전액 원상 복귀됐고요. 2차 추경을 통해서 40여억 원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반대 의견입니다만 어찌 되었건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다른 여러 절차를 통해서 회복이 된 만큼 존중은 하지만 작년에 썼던 특활비·특경비 사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실 것을…… 제가 작년에 열세 차례나 요구를 했습니다. 제출이 전혀 안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국민적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런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바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직은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직은 업무 지시를 못 하셨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장경태 위원** 제가 법무부와 검찰에 대검 부장급 이상 검사들의 출퇴근 내역 및 여러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8개월 동안 자료제출을 거부했고요.

공무원들의 출퇴근 기록이 사생활입니까? 제가 출퇴근 기록 달라고 했어요. 집에 가서 뭐 했는지 언제 귀가했는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출퇴근을 언제…… 대검 부장급 이상 간부들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특히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도 대검 산하 포렌식 인력들을 대기시킨 적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한 바 없습니다.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공무원들 출퇴근 기록이 왜, 제가 무슨……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거부하셨거든요. 내란에서 검찰이 어떤 경위로 선관위에 올 거라는 답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나왔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이게 어차피 제출하지 않으면 특검에서 압수수색까지 나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장경태 위원** 대검이 압수수색받아야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동의합니다.

○**장경태 위원** 이번에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노소영 씨에게 1조 3000억에 달하는 재산 분할을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 ‘선경 300억’이라고 노란 메모지에 작성된, 98년도에 작성된 메모와 99년도에 작성된 메모인데요.

대법원이 2600억 원의 추정금 선고한 이후에 김옥숙 여사가 돈이 없다고 호소했는데 그 이후에도 모 문화센터에 152억을 기부한다든지 210억의 보험료를 납부한다든지 혹은 여러 차명 아파트를 증여하고 별채 부지를 증여했다든지 혹은 바하마에 100억 계좌 개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10개 설립 등의 100억 이상 여러 가지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증여 과정, 납부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들 비자금은 끝까지 처벌하고 또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 아닐까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전부 동의합니다.

○**장경태 위원** 제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했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박준태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법무행정에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지금 국민의힘을 제가 내란 정당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해산에 관한 청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청원, 35만 5000명에 달하는 분들이 청원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충분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35만 명이나 하겠습니까?

1호 당원이라고 하는 내란 수괴로 불리는 윤석열의 불법계엄 내란행위에 대한 부분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께서 해제 시에 고의적으로 표결 불참한 게 아니냐. 아니, 본회의장에 계신 분들 왜 표결 불참하셨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고요. 또 한동훈 그 당시 당대표가, 당의 모든 권한은 당 대표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공지했는데 국회 밖의 당사에 갔습니다.

만약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에 국회의원들은…… 만약에 저희가 선전포고를 한다든지 전쟁에 필요한 전쟁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국회 동의를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전포고도 국회 동의 사항이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전쟁에 필요한 예산편성 다 국회 동의 필요하잖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비상추경해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저는 왜 당사…… 밖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왜 당사에 모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공지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1월 6일 내란 수괴 혹은…… 내란 수괴라고 다들 표현하시니까 저도 편의상 하겠습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44명이 방해합니다. 이런 부분은 현행법으로 원래 체포했어야 되는데 왜 체포 안 했을까요? 봐주기 수사입니까, 이거?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제가……

○**장경태 위원** 정당한 공무원의 영장 집행을 국회의원이면 방해해도 됩니까? 저는 44명 체포동의안 다 가결 던질 겁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하면 수사가 될 것이고 저희도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차차 판단해 보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위헌정당심판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유일하게 법무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헌법에 따라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청구하실 생각입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어쨌든 우리 헌법 규정이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경태 위원** 현재 판결 존중 안 하시나요? 현재에서……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장관후보자인 제가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 지금 말씀드리는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개별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판단과 선택 행위가 정당 행위로 귀결될 수 있는지는 차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장경태 위원**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하기 어려우시면 국회가 정당해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올라갔습니다. 저희 법사위에서 성실하게 논의할 거고요, 국회가 요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회가 요청하면…… 당연히 법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국회의 표결권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하여튼 입법 과정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꼭 입법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다음에 신동욱 위원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박지원 위원님까지 질의……

○**박지원 위원** 저도 오후에 하지요.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신동욱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오전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감사합니다.

○**신동욱 위원** 평소에 선배 의원으로서 자주 소통하던 분이어서 반가운 마음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질문은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질문이니까 진솔하게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확정판결이 났지요, 대법원에서?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신동욱 위원** 났지요? 면회하셨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한 번 면회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 당시에 ‘알리바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니, 그건 이화영……

○**신동욱 위원** 그건 김용이고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전혀 없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 당시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하게 된 것은 그 배우자로부터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서 의논, 이화영 피고인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서 전화를 받았 습니다, 꼭 접견을 해 달라고. 그래서 가 보니까 그 당시 이화영 피고인을 맡고 있던 변 호인이 변론 과정과 방법에 관련해서 서로 견해 차이가 있어 갖고 사임한다고 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정진상 씨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아라’, 김용에 대해서는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자꾸 내란 내란 하셔서 그러는데 후보자님께서 사법 방해하신 것 아닙니까, 사법방해죄는 없습니까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 당시 제가 위증 교사나 증거 인멸할 우려로 했다고 하면, 그 당시 교도관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다 메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입건을 했을 겁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다수가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후보자님도 공소취소 말씀도 하 셸고 민주당의 다수가 이게 검찰의 조작된 수사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는 이화영 부지사가 확정판결을 받았으면 민주당은 범죄 옹호 정당입니까, 아니면 법치 부정 정당입니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도 조작수사라 고 말씀하시는데. 법치 부정 정당입니까, 민주당은?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저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심에 의해서 다른 결과가 나 오기 전까지는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각 정당이……

○**신동욱 위원** 아니, 지금 존중 안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어쨌든 저는 각 정당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인 주 장을 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헌법 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 지지 않는다’, 면책 조항 아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신동욱 위원** 그리고 국회법 114조,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 조항도 있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오늘 질의에 보면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내란 동조 그리고 저희 당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기 때문에 정당해산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당시에 민주당 의원님 열일곱 분 참여 안 했습니다. 저희 당 의원들에 대해서 고의로 참여를 안 했다는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 민주당 의원 열일곱 분, 김민석 총리후보자 그리고 존경하는 이춘석 법사위원장님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분들 내심의 마음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의 로 참여 안 했다’, 그러면 이분들도 내란 동조하신 겁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렇게……

○**신동욱 위원** 하신 거예요? 아니, 내란 동조하셨냐고요.

○**김용민 위원** 우리가 내란 저질렀냐고요.

○**신동욱 위원** 질의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한남동 관저에 가셨던 사십여 분……

○**이성윤 위원** 내란은 그쪽에서 했잖아요, 국힘에서.

○**신동욱 위원** 조용 하세요, 질의 중에.

사십여 분, 그 당시에 국회의원만 있었던 것 아니고 수많은 국민들이 그 자리에서 공수처의 법 집행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관저 앞에 모였는데 그분들 전부 다 체포 왜 안 하셨습니까?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저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각자 의원들이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님들의 정치적 주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는 특검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돼야 될 문제지 제가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시는 부분은 다만 정치적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일단 정치적 주장 아니겠습니까?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지명된 이유는 혹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던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특별히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이어 가냐면 법무부장관후보군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나오셨고, 그런데 갑자기 정성호 후보자님께서 공소취소 얘기를 꺼내셨고 그래서 당시 기사를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정진상, 김용…… 본인은 좌장이라는 표현이 참 싫은 표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오래된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중요한 순간 순간에 후보자님이 계속 나타나시기 때문에 과연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야 될 법무부장관으로 적합한 인물인가라는 데 대한 국민적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이 되시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엄정하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생각입니다,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신동욱 위원**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위험한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족은 줄이겠습니다.

이 그림 혹시 아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배우자께서 지난 10년만 보더라도 현금 재산이 7.8억에서 24억 9000, 17억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득, 그러니까 아마 그림 판매 소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자료를 안 내시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2021년도에 후보자 배우자께서 양주시 서정대학교라는, 그러니까 후보자님 지역구에 있는 대학에 그림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내시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 요청을 해 봤더니 서정대학교의 집기비품매입비가 매년 수천만 원대에서 많아야 3억 정도였는데 이 그림을 매입한 2021년에 11억 39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그림, 그림 판매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저희가 복잡하게 다 말씀은 안 드리는데, 왜냐하면 서정대에서 계속 답변을 피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또 서정대의 주요 학교 관계자가 후원금도 많이 냅니다, 다년간. 고액……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원을 합니다. 혹시 이 그림에 대해서만이라도 얼마에 파셨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액수가 크다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관련해 갖고 저의 배우자가 그림을 판매한 건 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재산신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하고 2021년뿐입니다. 2020년도에는, 저의 배우자가 2019년도에 미대 대학원을 마치고 나서 대부분 개인전을 하는데 개인전을 하지 못해 갖고서 그다음 해에 개인전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저는 정치를 하면서 배우자가 그림을 팔게 됐을 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극명 말려 왔습니다. 또 국회에서 동료·선후배 의원님들이라든가 공직후보자들의 청문회 과정에서 그림 판매가 문제 됐기 때문에 일체 말렸고요. 실제로 그림을 판매, 보면 아시겠지만 사업소득은 2020년하고 2021년 딱 두 번뿐입니다. 이게 2021년도인데 2021년도 사업소득의 대부분이 저는 그림 판매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하여튼 양주시 지역구 건설사 같은 곳에서 그림을 많이 샀다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질문드린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는데 신동욱 위원님이 저를 특정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상발언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날 제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구에 행사가 있어서 내려갔고 연락을 받고 용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용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국회로 향하는데 여의도공원부터 모든 차량이 막혀서 거기서부터 제가 국회까지 뛰어왔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한 게 있는데, 국회 정문에 도착하자 정문이 다 폐쇄돼 있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지시로 경찰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들과 실랑이를 하는 사이에 ‘와!’ 소리가 나면서 해제된 것을 들었습니다. 그 뒤에 문이 열리고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같이 참여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잠시 정회했다가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와 함께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시 노동법학회 활동도 하셨고 6·10 항쟁 시위에도 참여했고 또 노무현 변호사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던 기억도 생각합니다.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었는데 그래도 공적 마음이 있어 행동으로 나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판검사로 임용될 만한 충분한 성적이었지만 인권변호사의 길을 결심하고 그 길을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후보님은 정치인 중 그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오랜 시간 알아 왔고 또 가장 어려울 때 옆을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쓴소리하신 적도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굳이 쓴소리라기보다도 다른 견해들을 자주 전했습니다. 언론 기사에 나올 때도 비판적인 기사를 도지사나 또는 당대표에게 전달하기 쉽지 않습니까?

○박희승 위원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필요할 만한, 참고할 만한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보내 드리기도 하고 또 당대표 하실 때 당의 다수 의견과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 제가 생각해서 그 다른 의견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라는 걸 자주 전했습니다.

○박희승 위원 후보자님의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도 아마 굉장히 긍정적으로 후보자님을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잘 보좌하시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조언과 쓴소리도 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대통령의 법무참모로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법치행정이 이루어지고 또 민주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종결권, 영장·기소 독점, 공소유지, 형집행권 등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왔고 이런 것들이 또 정치적 편향성, 과잉수사, 과소수사, 봐주기수사,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질의에 답변하실 때 어쨌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상호 견제 구조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신다고 그러셨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어쨌든 세세한 부분은 아마 입법사항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앞으로 국회

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잘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문제지만 사실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도 필요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보복 기소한다든지 표적 기소한다든지 중복 기소 등으로 인권침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검찰의 쪼개기 기소 사례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쪼개기 기소를 하다 보면 미결구금일수가 장기화될 수가 있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확정판결을 받아서 추가 수감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최근에 현재도 수감돼 있는 이상직 전 의원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사실 이상직 전 의원은 2023년 4월에 특경가법 위반죄로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형량의 적정함에 대해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 회사가 지금 회생절차를 거쳐서 회사도 넘어갔고 무일푼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 대기업 오너들에 대한 재판에서 보통 집행유예 3년에 5년 하는 그런 정도의 사안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업무방해죄 또 특경가법 배임을 각각 기소해 가지고 지금 일심에서 징역 1년 6월 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병합해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기 기소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추가 기소를 또 하나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의 실질화를 위해서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든지 또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 도입 등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오남용 통제 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중요한 게 수사·기소가 한 기관에 독점돼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돼 있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기소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기간이 6개월 정도 되니까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 6개월이 도파하게 되면 풀어 줘야, 석방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건을 영장 청구하고 또는 법원에 별건으로 나눠서 기소해 가지고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이걸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병합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감경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수사·기소를 분명히 확실하게 하고 기소청이 관련 사건이 있을 때는 모아 가지고 기소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들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개인적으로 공감하신다며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로스쿨제도 운영과, 저도 사법시험을 부활해서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더 뚫으면 좋겠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시험제도로, 로스쿨제도로 바뀐 게 그 당시에 고시 낭인이라든가 또는 사법시

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바람에 국가적인 인재 낭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저렴한 수가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법조인들이 배출돼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지만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시험 시행 이후에 또 변시 낭인……

○박희승 위원 음서제로 흐르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변시 낭인이 양산되고 있고 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그런 학생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다년간 시행돼 왔기 때문에 쉽게 해소할 문제는 아니고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본 다음에 법조계 전반의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축하합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했는데 법사위 생기고 오늘이 제일 조용합니다. 이것은 정성호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조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야 위원 공히 아주 질문을, 청문을 수준 높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정성호 장관후보자가 이재명 대표의 좌장이 아니었다, 저는 그것은 믿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늘 당에서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게—대통령 되기 전이지요—바른, 쓴소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앞으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런 쓴소리, 바른 소리를 계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장관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균형 잡힌 또 합리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공개적으로 장관이 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과 사적으로 만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유념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이 사람 서울구치소로 보낼 게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산을 76억을 신고하고 영치금 400만 원이 없다 그리고 아니, 윤석열이 지금 내란 두목으로 구속돼서 구치소 갔지 무슨 조선히otel 갔습니까, 롯데호텔 갔습니까? 에어컨 없다 이런 소리 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됐든 특검에서 나와라 하는데 방에서 나오지는 않으면서 운동 안 시켜 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치를 할 때, 서울구치소장이 거부했을 때 강제 체포로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어쨌든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인데, 대통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박지원 위원 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예우를 받지.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어쨌든……

○박지원 위원 그런 짓을 하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앞으로 일반 재소자들이 그렇게 거부할 때 되겠어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일반 재소자들이 거부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특검에서도 또 수사관들을 같이해 가지고 인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서울구치소장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만약 취임하시면요 영을 세우세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데 내란 우두머리가 ‘나 방에서 안 나가’ 이게 말이 되냐고. 좀 엄격하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유념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8·15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15 사면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직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장관으로 취임하면 검토할 용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 아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저도 해 본 사람이에요.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필요하다 하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고 저희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새 정부가 섰으니까 대사면을 해서 민생사범이나,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부당하게 정치적 처벌을 받은 공직자들에게 대사면을 해서 길을 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세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어쨌든 대통령께서 사면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에 대해서 사면을 건의할 생각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이걸 제가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제가 언론에 가서 과거에 조국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말씀하셨고 김웅 전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조국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죄와 형벌과의 사이에 비례성·균형성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언론에서 한번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제가 언론에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점과 관련해서는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최근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를 비롯해서, 이철우 교수는 잘 아시다시피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자제분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60년 지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많이 공헌을 하신 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업무 집행을 보고 반대 입장에 서 있어요. 이분도, 서울 법대 교수들, 법과대학원 교수들 34명이 사면·복권을 건의했는데 장관으로서 본래의 소신도 가지고 있었지만 검찰이 일가족을 학살시켰잖아요. 그리고 설사 유죄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소정의 양형을 이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꼭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이번에 법학 교수분들의 건의 내용도 그런 것 같습니다. 조국 일가가 어쨌든 확정판결을 받았으니까 판결 내용에 따른 그 죄보다도 양형이

과다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저도 법안을 발의했지만 최근에 다시 사형제 폐지가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퇴임하면서 마지막 사형집행을 하고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폐지 국가가 됐는데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장관의 소신은 뭐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저는 과거 여러 차례 사형제 폐지법안에 동의를 해 왔습니다. 다만 장관으로서는…… 사형제 폐지 문제가, 가장 중한 형 아니겠습니까, 국가 형벌권 체계의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에 극악한 강력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의 국민감정들 이런 점들을 고려해 가지고 국회에서 입법적인 결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사형수도 그렇고 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사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사형제 폐지가 EU 같은 곳에서는, 폐지 국가가 아니면 EU 회원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후보자가 잘 아실 겁니다. 개인적 소신을 꼭 살려서 사형제 폐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각별히 유념하고 위원님들의 입법 논의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후보자님,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 ‘형과 죄와의 균형성에 대해서 잘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장동혁 위원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에서 정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리고 법원의 양형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양형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동의합니다.

○장동혁 위원 모든 국민들은 본인의 양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적정한 양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국민들 중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형과, 양형 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찾아서 사면하실 것입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런 취지라기보다도 조국 일개인보다도 조국 가족 전체,

배우자가 받았던 형들 또 가족, 자녀들이 받았던 다른 여러 가지 불이익하다기보다도 이 사건에 따랐던 여러 가지 처분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장동혁 위원**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면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도 있고 국민들의 여러 법 감정도 고려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과연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사면의 기준과 맞는 것인지, 일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현재 결정문의 일부를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이 부각된다. 정당의 목적이란 어떤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이나 지향점 혹은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획 등을 통칭한다. 이는 주로 정당의 공식적인 강령이나 당헌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그 밖에 정당 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적인 발언, 정당의 기관지나 선전자료와 같은 간행물,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거나 정당의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당원들의 행위 등도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당원의 행위, 누군가의, 당직자의 행위, 어떤 행위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헌정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당에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동의합니다.

○**장동혁 위원** 너무나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관저 앞에 갔던 저희 국회의원들을 일부 이미 고소·고발한 경우가 있고 저도 그 피고발자 중의 한 사람이고요. 얼마 전에 경찰에서 각하 처분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행위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서 그것이 의결된 순간 법률적으로는 그런 모든 상황이 그 당시에 그때 종료된 것이다, 그 이후에 다른 정치적인 공격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어떤 위원님의 질문에 국회의 해제 요구 그리고 의결된 순간 그 상황은 종료됐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판례가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예, 판례가 그렇습니다. 당연한 법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이미 규정짓고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위헌정당을 해산해야 된다고거나 청구해야 된다고거나 오늘 질문하는 것에 대

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는 4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아마 어디 가서 내가 어떤 절차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숨은 그림찾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아까 말하셨는데 지금 이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은 공소만 담당하도록 하는 이것이 검찰이 그동안 쌓아 온 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놓고 결국은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하나의 기구를 설치하는데, 그런 정도의 권한이 집중돼서 모든 권한을 통합한 기구를 둔 나라는 중국, 북한, 러시아 정도가 있고요. 중국의 규율위원회와 비슷한데 중국의 규율위원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보면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습니다.

권력을 분산한다고 하고 결국은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권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래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그리고 견제도 되지 않는 기관을 두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을 두겠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결국 대통령과 여당이 사실상 위원 전부를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국가수사위원회가 과연 정치적 독립성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에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서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 놓고 아까 최대한 빨리 이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지금의 형사소송법 체계와 전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형사소송법을 완전히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법안이 발의됐고 우리 법사위에 서 논의가 시작됐고 소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공청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좀 더 신속하게 또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논의해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였습니다.

○**장동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지명 축하드립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감사합니다.

○**김용민 위원** 검찰개혁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 질의드릴게요.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신설해서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맡기겠다라는 게 이번 개혁안의 핵심인데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게 되면 이게 기존 검찰의 특수부를 특수청으로 승격시켜 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면 과거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항상 법무부장은 검사 출신으로 했습니다. 직전 정부도 그랬지요. 검사 출신의 법무부장관, 검사 출신의 공소청장, 검사 출신의 중수청장으로 연결되면 그냥 하나의 검찰청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 바람직합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어쨌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목적, 기소와 수사의 분리 이런 취지에 좀 어긋나는 측면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저는 이것을 법무부에 두는 게 좋은 건지 행안부에 두는 게 좋은 건지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일단 행안부에 두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 법무부에 두는 것에 이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것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다시 한번 숙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제가 잠깐 강조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 선고한 것은 2014년 12월 19일이고 당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그 이후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법원 판결 전에 정당해산 먼저 됐습니다. 게다가 대법원에서는 내란음모 일부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해산됐습니다. 그때의 논거들을 지금 잘못 인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정당 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적인 발언 그리고 당원들의 행위 이런 것들이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계속 얘기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정당 대표가 아니라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국회의원 한 명이 내란, 일부는 무죄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어요. 게다가 그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 그 당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서 당대표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선거에도 개입합니다. 공천에도 개입해요. 특히 22대 총선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으로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 당에서 배출했던 대통령인 내란 수괴가 그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내란 정당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당 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란 선동·선전에 동의했는지 이것도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구조만으로도 그냥 내란

정당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결정문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그 수장인 이석기 의원의 주도하에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을 실행하고자 했다’, 이게 정당해산 사유예요.

현직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 맨날 뭐라고 했어요? 하이브리드 전쟁이래요. 지금 전쟁 시기랍니다. 전쟁 시기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북한에 전쟁·군사 도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수사 중이지요. 그러고 나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국회의원들 끌고 가서 수장시키려고 하고 수거하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사실 일심 판결 볼 것도 없이 내란, 지금 정당해산심판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일단 흔히들 대통령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1호 당원이라고 얘기합니다. 1호 당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그 정당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의 그러한 영향력이 정당의 활동들, 목적들 또 개별 의원들의 선택과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저는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 개입, 선거 개입에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다 직접 개입한 것들이 수사가 되고 있으니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현재 결정문에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피청구인의 활동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똑같지요? ‘법치주의 부정’, 지금이랑 똑같지요? 그랬던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똑같습니다. 정당해산 사유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스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입국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고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했던 사람들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고. 오늘은 윤석열 내란 수괴를 접견하러 가겠다고 했다가 지금 특검이 막았습니다. 계속 정치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출입국관리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조 2항인데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법무

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안 하면 강제되거 대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이시긴 하지만 법무부의 조치, 무엇이 필요한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일단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사실관계 파악한 이후에 정치활동이라 판단되면 엄하게 중지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적의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아마 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질의의를 마쳤는데요, 저는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위원으로서 4분간만 질의하겠습니다. 4분만 넣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저는 축하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힘내시라 하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해 봤어요.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왜 정성호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을 맡겼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 검찰개혁에 대해서 완수해라 하는 하나의 사명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개혁의 과정이나 개혁 후에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라는 취지가 같이 부여됐다, 그 두 가지를 잘할 수 있으신 분이 정성호 후보자님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부분과 나누어서 두 가지 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검찰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겠다 하는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서면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서면답변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한 말씀을 하셨고,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수사청을 독립하는 의미가 저는 거의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민점은 그러면 기소하기 전에 수사청이 수사를 하거나 경찰이 수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소 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수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실은 기소 후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수사청 독립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항상 느꼈던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특히 특수부, 예전에는 공안과 기획 부서의 10%도 안 되는 검사들이 정치에 줄을 대고 정치검사 역할을 해 왔습

니다. 그런데 나머지 90%의 검사들은 형사부와 공안부에서 토요일 날 저녁에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지방에서 서울 땅 한 번도 못 밟고 10년 동안 있다가, 20년 있다가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저는 검찰의 인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검찰 인사가 이번에 잘못하면 마지막 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성호 후보자님이 장관님이 되셔서 하는 인사는 검찰이 한을 품고 있는, 잘못된 특수·공안·기획 위주 검사의 승진이 아니라 힘들게 쌓아 온 형사부나 공판부 또 말없이 지방에서 근무한 지방 검사들이 정말 ‘새로운 법무부장관은 인사가 다르구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니까 인사가 다르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는 인사를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최종적인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고려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주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작할 때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준비된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제공하셨습니까?

○**박규택 위원** 위원장님, 저는 받았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그리고 아직까지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준비해 주셔서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많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위원장 이춘석** 그리고 주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 중에서 전현희 위원님이 출석을 못 하셨는데 또 궁금해하실 국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전현희 위원님은 대통령 특사로 EU를 가셨기 때문에 오늘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하셨다 하는 부분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첫 번째 질의로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얼핏 자료제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이 너무 비협조적이어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저는 새로운 입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프랑스 형법에 보면 ‘5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는 중죄 또는 경죄를 범한 피의자와 일상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자가 자기 재산의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가공의 자금 출처를 제공해 은닉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구금형과 7만 5000유로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것 보면 입증책임이 전환됐거든요. EU에서도 인정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법무부장관은 범치주의를 확립하고 부패범죄를 근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입증책임을 전환한 규정을 둔 법안에 대해서 도입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면 외국의 입법례라든가 또 다른 사례들을 참조해 가지고 저희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3대 특검이 운영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금 검사가 몇 명이 동원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나와 있는 것처럼 한 120명 정도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120명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평검사가 전부 1250명입니다. 그러면 그중 평검사의 10%가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민생 수사는 뒷전으로 밀리는 거지요.

그런데 민주당 논리대로 한다면 검찰 수사권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를 이렇게 대거 투입시키고, 원래 민주당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경찰이나 공수처 인력으로 특검 꾸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좀 모순적인 상황 아닌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모르겠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특검이 운영되고 있는데……

○**조배숙 위원** 아니, 자꾸……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현재 동원된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폐지하자, 폐지하자 하면서 특검에는 또 120명이나 대거 투입해 가지고…… 이게 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과거에 망신 주기 식 수사를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특검에서 그대로 또 망신 주기 식 수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하는 이 검찰개혁이 공정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정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이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지금 굉장히, 일선의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못 하고 수사 지연과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의자가 활개 치는 피의자 천국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지나고 나면 분석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없는지 반성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다시 또 검찰 해체 이런 이름으로 형사사법시스템 전체를 재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청, 공수처 그다음에 중수청 또 해양경찰청이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다가 수사권을 주면 그 기관들도 또 비대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또 경찰 개혁하자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문제의 근본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검찰권을 이용한 정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사건을 사법화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오히려 저는 정치권이 수사기관의 인사권을 좀 약화시켜야 된다. 지금 현재는 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검사도 법무부장관

을 통해서 임명하고, 지금 새로 만드는 이 수사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모성준 판사의 ‘빨대사회’라는 책 읽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직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배숙 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피해를 아주 세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후보자님, 법무부장관의 중요 임무 중에 범죄 예방이 들어가 있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작년 살인범죄 여성 피해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아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333명이라는 얼마 전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통계를 시험하려는 것은 아닌데요 그만큼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 하면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이나 이런 선행범죄로 신고됐던 피해자가 32.4%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됐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좀 더 예산을 들여서 세밀하게 피해자를 보호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만큼 예산 배정이 중요하고요. 올해 5월에 전 연인에게 납치 살해됐던 피해자가 무려 피해 신고를 아홉 차례나 했는데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법체계의 개선이 정치 논리나 이런 데 휘둘릴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나 이런 예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강력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전자발찌 제도가 강력·형사 사범을 막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야간에 전자발찌를 끊고 범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한번 범행을 하면 단순히 절도 정도 하는 게 아니에요. 강도나 강간이나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정말 강력한 범죄를 해서 한 사람 인생을 완전 망쳐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 역시 법무부 직원 1명당 17명을 감시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좀 떨어져요.

저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감시 인원이 늘수록 재범률이 좀 줄어드는 추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발찌 찰 정도면 보통 3범, 4범 해서 강도·강간 같은 강력범죄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여기만 정확하게 정밀감시를 해도 우리나라 재범률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자발찌 감시 인원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아마 파악이 안 되셨을 거예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죄송합니다.

○**주진우 위원** 괜찮습니다. 지금 후보자니까 당연하지요.

이게 300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지금부터인데, 자꾸 검찰개혁 문제를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 이런 관념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말씀하시는데 결국 국민이 편해지느냐, 범죄가 없어지느냐 또 예산 배정이 효율적이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국가수사위원회 새로 만들게 되고요, 지금 개편안에 따르면. 멀쩡하게 지금 검찰 운영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그것만 고치면 되는데 검찰은 기존에 있던 인원들을 또 자르지는 못해요. 공소청이라는 이유로 기소만 딱 담당하게 하면서 기존 인력은 또 유지를 해야 되고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이름 바꾸니까 모든 간판부터 시작해서 집기류, 내용들을 예산 들여서 다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복잡해져요.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 검찰, 경찰, 공수처에다가 지금 특검 3개 별도로 가동 중이지요, 또 상설특검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디서 조사받을지 너무 헷갈릴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방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사이버 도박범죄가 발생했다, 지금 바뀐 법에 따르면 중수청에서 수사해야 됩니까, 경찰에서 수사해야 됩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됩니까?

바로 즉답이 안 되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주진우 위원** 장관님이나 저처럼 법률을 좀 오래 한 사람들도 지금 즉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고발했느냐, 고소했느냐, 112에 신고했느냐에 따라서 이의 절차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수청에서 수사했는데, 내가 피해를 봤는데 이의 제기를 하려고 그러면 지방중수청 갔다가 중앙중수청 갔다가 국가수사위원회에 또 가야 돼요. 이렇게 복잡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국가수사위원회 인력 얼마에 예산 연간 얼마 드는지 아세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직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게 비용추계도 나와 있어요. 지금 예산이 1500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은요, 지방중수청까지 다 합치면…… 지방중수청 몇 개 설치됩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광역 단위로 한 5개 이상은 설치되는……

○**주진우 위원** 그게 다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고 지금 검찰청처럼 지청 단위까지 다 만들려면 전부 다 사무실 설치하고 거기 인력 새로 다 뽑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예산으로는 추계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의 중복으로 하는 것보다 진짜 필요한 예산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 지적하신 범죄 예방이라든가 교정·교화 관련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입니다. 특히 검사들의 후견적 역할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장관에 임명된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소홀함이 없게 또 제도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범죄 예방 관련된 예산은 제가 직접 나서서라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는 제도를 좀 제대로 설계하자는 얘기입니다. 너무 급하게 가다가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하여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또 세밀하게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후보자님, 최근에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그리고 또 유사수신 등 이른바 다중피해범죄로 서민 피해가 심각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들은 서민이 다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까지 생겨나면서 경제적 살인범죄라고까지 칭해지기도 합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에만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조 30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통계를 보면 2년 동안 전세사기의 피해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고 피해 금액이 3조 2000억에 달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이 일반 범죄처럼 낮게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중의 고향을 빨아먹는 범죄들 엄청나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위해서 양형기준을 제대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범죄 같은 경우는 주범들의 소재지가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 이쪽이다 보니까 사실상 수사를 포기해 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를 생각하면 법무부, 검찰, 경찰이 다 나서서 국제적인 사범공조나 수사공조 이걸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다중 사기 피해 관련해서는 특경법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개별 피해자별로 5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 특히 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사건들이 개별로 나누다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되는 게 아니라 개별로 나누다 보면 지금 양형기준과는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의회,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양형은 어차피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에 피의자가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기소할 수가 없고 그 경우에는 부가형에 불과한 추정제도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제도적 한계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사건을 보면 윤드로저 사건, 소라넷 사건 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사망을 하거나 해외에 도피해 있다는 사정으로 범죄수익금 등을 몰수·환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제도적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 피의자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몰수·추진을 위한 재판을 별도로 독립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독립몰수제 도입과 관련해 갖고 일부 양형 체계에 변화를 주는 거니까 신중히 논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이걸 꼭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하거나 또는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수익이 오히려 일실되지 않도록 반드시 도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 중앙고등학교 3학년생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요청을 해 달라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법에 대한 편견, 법에 대한 불신이 많다, 그런데 현행 공교육 체계 안에서는 법교육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것을 활성화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박균택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요 지난 내란 사건 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시민들이 여기 저항에 나서 주고 또 군인과 경찰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덕분에 우리가 그 불법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역시 민주화 이후에 학교에서 실시했던 법교육, 민주주의교육이 정말 중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법교육지원법을 보면 대부분의 조항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법무부가 교육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교육 현장에서 이 교육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학교 전 과정을 통해 갖고서 공민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떠한 권리가 있고 또 국가를 위해서 어떠한 의무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청소년기에 도달해서는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성과 관련해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교육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해 갖고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택 위원** 후보자님, 지금 3개 특검이 운영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광규택 위원** 특검에서 일선 검찰청에 파견검사를 보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끼어들어 가지고 A검사는 되고 B검사는 안 되고, 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규택 위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A검사는 되고 B검사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것도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광규택 위원** 적절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잘못하면 직권남용범죄도 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공문은 아니지만 법무부에서 특검에

서 파견 요청했지만 결국 파견되지 않은 검사가 총 39명이고 그에 대한 이름은 은닉 처리해 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공문은 안 주셨어요. 이것으로 자료제출은 한 거라고 제가 일단 인정은 하겠습니다.

왜 이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냐 하면, 실제 사례입니다. 어떤 특검에서 특정한 검찰청에 파견검사 A·B·C·D를 보내 달라 이렇게 했어요. A, B, C, D가 개인 사정이 있거나 그 청에 무슨 업무가 있어서 못 갈 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특정 검찰청에서 A·B·C·D 검사 파견하겠습니다 했어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A·B 검사는 과거에 윤석열 정권 때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를 했던 검사니까 파견 안 된다. C, D만 보내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A, B를 못 보내고 특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C, D하고 다른 검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장관님이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특이하게도요 ‘이제 검찰은 못 믿겠다. 검사는 정치검사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 특별검사를 선정했고요. 그에 맞는 파견검사들로 특검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특검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한들 신뢰가 가겠습니까?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런 특검의 구성·운영에 법무부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기관, 특히 대통령실에서 관여하는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후보자님,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느 나라입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저는 현재로서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곽규택 위원** 아이, 감동했습니다.

지금 통일부장관후보자께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 늘 노동부장관후보자는 ‘본인 입장은 없다. 통일부장관과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것을 물어본 국민의힘 위원에 대해서 또 좌파 성향의 매체는 ‘색깔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법적으로 보면 휴전 상태지요, 후보자님?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휴전 상태의 교전국에 대해서 주적이라고 못 부르는 나라가 무슨 나라겠습니까? 이건 색깔론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법무부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법무부의 제일 주된 부처의 목표는 부정부패 척결과 자유민주질서의 확립 이거였습니다. 그중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여기에는 당연히公安 관련된 업무가 포함돼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간첩죄 부분에 대해서도, 간첩죄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그 이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원래 간첩죄의 개정 부분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봐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부에 서 정부 부처안으로도 낼 만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직 제가 검토한 바는 없고요.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 국민의힘을 가리켜서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말이에요 ‘북한 돈줄 정당이다’ 이렇게 말하면 민주당에서 당연히 기분 나쁘겠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겠지요.

○**곽규택 위원** 과거에 DJ 정부 때부터 지금 현 대통령까지 북한 돈줄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정당에서 배출한 인사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북한 돈줄 정당이 명확함에도 그렇게는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내란 정당 운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북한의 평양에 13박 14일 머무르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 정상 회담 준비 남측 대표로 갔었습니다. 가니까 말도 통하고 북한의 평양이 고향인 사람도 많고, 북한하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북한하고 우리가 지금 통일이 되지 못해서 서로 적대적인 부분이 있느냐 우리는 통일되어야 되는 한민족이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꼭 나누고 분단시켜야만 속이 시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공감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의했었지만 검사가 누구든 기소를 조작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감을 가져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미워한다고 해서 그런 사감으로 조작해서 기소하면 그 검사 잘못했으면 징계받고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서영교 위원** 당연하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서영교 위원** 대통령도 대통령이든 일반인이든 공소가, 기소가 잘못됐으면, 공소취소 사유가 있으면 공소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물론 공소취소는 굉장히 예외적인 사안입니다. 대개 공소제기한 이후에 진범이 밝혀진다고 하는 또는 공소제기된 이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진행됐다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유기 때문에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지난번에 정치인을 놓고 수사한 검사가 기소도 하고 재판에도 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지금 현재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사하고 기소하고, 기소한 검사가 공소유지까지 하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영교 위원** 현재도 그건 법 위반이잖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게 되면 공소취소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든 지금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그리고 또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내정자에게 놓여진 과제, 우리 법사위에 놓여진 과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앞에 놓여진 과제는, 검찰이 검찰로 국민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정치검사로 경쟁자를 잘못 수사해서 기소하고 그리고 끝내 난도질하는 이 상황을 바꾸자고 지금 정권도 교체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평가돼서 교체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약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마약 수사 철저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서영교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으로 있던 시절입니다. 2022년 6월~2023년 9월 그 사람이 인천지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마약을 말레이시아에서 가지고 온몸에 4kg씩 칭칭 감아서 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게 백해룡 경정이 이야기하는 거고, 이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멈췄어요. 그게 심우정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심우정은 지금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데 심우정이 그것을 덮었다? 그러면 심우정이 덮었을까? 또 그 위에 누가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낱알이 오늘 또 공개하고 고발합니다. 이 부분 철저히 밝혀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는데 면밀히 주시하고 또 과연 특검이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검찰에서 경찰하고 합동수사를 하고 있지만 저는 면밀히 주시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충격적인 사진 지금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의 건진 불당을 오늘 압수수색을 했더니 그 안에 비밀의 방, 거실에는 일본 신 아마테라스 굿당이 있더라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건진 법당의 비밀의 방, 거실에는 일본 신 아마테라스 굿당이 있었다.

이거 온 세상에 다시 한번 알려 드리면서 아마테라스 굿당, 일본 신을 섬기고 있는 건

진 그리고 그 건진과 김건희, 윤석열, 모든 실체를 낱낱이 밝혀 줄 것을 법무부장관과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후보자님, 앞서 광규택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는 정치적 기소 관련해서 그 검사들에 대한 징계나 압박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위법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하겠다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떠한 입장인지 지금 명확한 입장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정부 박성재 장관이 알박기 인사한 법무부 검찰관, 대검 검찰부장으로 하여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복무하면서 위법 수사를 자행했던 범죄적 정치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징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법무부 명칭이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Ministry of Justice) 아닙니까? 그런데 명확한 입장을 안 밝히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후보자님, 앞으로 이제 검찰총장 인선하실 텐데요, 이 절차를 아시나요?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서너 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님께서 추천위의 내용을 존중해서 후보자를 대통령께 제청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에 송광수 검찰총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가 거론되자 ‘내 목을 쳐라’ 이러면서 검찰개혁에 반발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은 김학의 출금 사건, 월성 원전 사건, 울산시장 사건 등 정치적 수사에 자신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올인했고 저 사건들은 전부 다 무죄가 났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대북송금, 백현동, 선거법, 위증교사 등등의 정치적 수사에 올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검찰총장을 추천하실 텐데 이러한 검찰주의자들, 앞서 말했던 송광수·윤석열 이런 검찰주의자가 검찰총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겠지만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실히 이해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이 검찰총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리고 후보자님,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검찰 인사를 하실 거고요. 오늘도 언론에서 검찰 인사를 7월 말 8월 초에 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일각에서 검찰에는 검사들이 모두가 친윤 검사이고 반윤·비윤 검사는 없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윤석열 검찰 쿠데타에 가담하고 검찰 독재에 복무한 친윤 검사들은 한 줌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검사들은 반윤이거나 비윤, 적어도 상식적인 검찰 공무원들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정녕 개혁적인 검사 인사를 하고자 하신다면……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 이전 2020년·2021년 시행된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인사에서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발령받았거나 일선 지검장, 지청장, 차장으로 발령받은 능력을 인정받은 검사들 중에서 수십 명의 간부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반윤·비윤으로 찍혀서 법무연수원, 고검, 지검의 중경단과 인권보호관으로 한직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에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법무부에서 제대로 된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이 검사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검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윤·반윤 혹은 상식적인 검사들이 잘못 몰려서 한직으로 전전하는 이 검사들이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가 되면 검찰개혁을 수행할 중책으로 검찰의 전면에 나서야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검사들을 중용을 해야 더 이상 정치검찰의 준동을 막고 검찰개혁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님 의견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과거 검찰 인사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어쨌든 정권의 요청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부당한 기소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검사들에 관련해서는 면밀히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후보자님께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제대로 된 검사들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장관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특검에서 법무부에 파견검사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마치 대통령실에서 의견을 줘서 일부는 파견을 하고 일부는 파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그것이 확인된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청법 34조에 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하게 돼 있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 임명이든 보직 이동이든 파견이든 모두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법상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김기표 위원** 그러면 특검에 파견되는 것도 사실상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사실이 맞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왜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하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지금 제가 그 관련 법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모든 검사의 임명과 보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최종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내용이 야당 위원들한테 지금 가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특검에 파견되는 것이 어떻게 운운하면서 야당에 그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규명을 하십시오. 어떻게 돼서 야당 위원들한테 그 얘기가 들어갔고 어떻게 해서 야당 위원이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지,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마치 특검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프레임으로 작용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에게 장관이 되신 다음에 이걸 규명해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런 부적절한 행동들이 저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이 좌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함부로 좌시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확인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관규택 위원님께서서는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 관련해 갖고 본인의 추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검찰 내부 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됐다면 한번 명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내부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좌시할 수 없는 얘기가. 그렇다면 장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규명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아까 검찰의 인사권을 제한하면 되지 검찰개혁을 왜 하느냐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이른바……

○**조배숙 위원** 아니, 왜 하느냐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을 하자는 거지.

○**김기표 위원** 제가 그 위원님 성함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말씀을 왜 하십니까?

보십시오. 민주당 계열의 정부에서 그동안 검찰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검찰에 대해서 놔뒀어요. 이른바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는 계속해서 검찰과 같이 가면서 검찰은 정권에 부역하고 정권 죽이기에 계속해서 매진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어땠습니까?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국세청, 검찰 중에 검찰을 권력 유지에 동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손에 죽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했습니다. 저는 순진했다고까지 봐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역시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뿐 검찰을 정권 유지에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검찰이 자기 조직 논리에만, 자기 조직 보호에만 급급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검찰이 스스로 자기 권익만 보호하는 집단, 그렇게 변해 갔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정권을 가져왔으니 검찰을 우리 정권 유지에 이용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우리는 국민의힘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 검찰을 이용하려면 검찰개혁을 왜 하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군인과 같은 말 잘 듣는 최정예 검찰이 있다면 당연히 개혁 않고 가야겠지요.

그러나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권익, 국민들의 이익 그다음에 검찰이 정말 민주화돼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검찰개혁을 운운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선의를 가지고 검찰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권력을 그대로 놔두니까 다시 정부가 국민의힘 쪽으로 바뀌니까 바로 국민의힘 쪽에 부역해서 정권 유지에 지금 기능하고 있다면

아예 누가 이용해도 정권에 부역하지 않고 국민의 권익에만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단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역사적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후보자님께서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이 정부에서 반드시,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검찰이 정권의 유지에, 정권의 이른바 개가 되는 그런 역사가, 흑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꼭 개혁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정권의 이익만 생각한다고 하면 정권이 인사권을 갖고 검찰을 통제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국민주권정부하에서는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길게 봤을 때 국민의 인권 보호를 확실하게 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권력기관들을 제대로 통제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롭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김기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문준비단장님 계시지요? 좀 전에 광규택 위원님한테 제공했다는 특검 차출 검사 명단은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대부분 동의가 되는 얘기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해 봐도 검찰이 그동안 여러 문제점을 노정했습니다. 특히 표적수사, 강압수사 또 수사 절차를 위반한 사례들 그리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여론에 기대서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별건수사까지도, 아주 많은 사례들이 이미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상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그러면 지금 특검이 그런 과거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과거 검찰의 그런 행태가 문제였다면 지금 아주 강압적으로 망신 주기 식 수사를 하는 특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수사권, 기소권 그렇게 분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권한을 모두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제도 변화를 말씀하셔야지요.

두 번째, 검찰을, 수사기관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목표가 아주 좋습니다.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동의하고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 제시한 방식을 보십시오. 검찰 해체해 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공소청을 만들어서 각각 행안부와 법무부 산하로 쪼개서 배치를 하고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서 거기서 모든 수사기관들을 지휘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총리 산하의 위원회에서 국가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그리고 국수본까지 해서 모든 기관들이 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여부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권도 행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수사위원회는 대부분 정부 우호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활동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수사기관이 재편되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권력은 그 수사기관으로부터의 감독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벗어나겠다 이런 발상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검찰해체법에 대해서는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방법은 신중하게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준대 위원** 이게 지금 두 가지 보도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여야가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 야당의 입장도 중요하다’ 이렇게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고요, 본회의장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 ‘기왕 할 거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메모장 사진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 중에 진심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빨리하면 좋겠지만 여야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경우에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실 겁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저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법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한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발의를 했는데, 어쨌든 법사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해서 충분히 좀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했던 건 어떤 선배 법조인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어쨌든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된 문제기 때문에 법무부라든가 검찰이 선제적으로 의견들을 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서 갖고 제가 메모장에 메모를 해 놔던 걸 읽었던 것입니다.

저는 두 얘기가 모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어차피 이러한 논의 과정이 제가 처음 국회의원 시작했을 때 2004년도부터 시작돼 왔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었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 점들 다 모아 갖고 법사위에서 정말 한두 번 소위 하는 게 아니라 법조문 하나하나를 갖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어떻게 예측되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준대 위원** 좋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면 가급적이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단, 야당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어쨌든 결정은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준대 위원** 내용을 국민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을 국민이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법사위에서 충분히 여야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또 논의되는 과정이 다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법무부도,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안팎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갖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윤석열이 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이성윤 위원** 대통령이라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을 건데 구속이 된 경우에도 별도의 예우가 됩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기 때문에 경호 외에는 일체 예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구치소에서 특별 예우를 할 수 없는 거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할 수 없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윤석열에게 독방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에어컨이 없다. 약을 못 먹게 한다. 운동시간 안 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수용된 방에는 에어컨이 없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지금 전체 구치소 시설에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저도 현장에 가 봤지만 구치소 시설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윤석열 약을 안 줬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윤석열 운동을 안 시켰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것도 따로 시간을 분리해 갖고 운동시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윤석열이 이렇게 칭얼대고 이렇게 국민 진상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게 특검 수사에 단단히 존 겁니다. 줄아서 수사받기 싫어서 꿈수를 부리는 거예요. 장관이 되시면 윤석열이 꿈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오전에도 말 나왔지만 윤석열 총장 그다음에 대통령 시절에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위원회 법률이 발의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진상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3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되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이인자 김용현에 대해서는 바로 구속을 해 가지고 석방되지 않도록 만들었고 윤석열은 특검이 나오자마자 20일 만에 구속을 했습니다. 이 특검이 새로이 수사를 한 게 아니고 기존의 기록을 갖다 봐서 바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채 해병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도 전광석화처럼 출국 금지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보시기에도 수사 잘하는 걸로 보이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그렇지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 보십시오. 작년에 김건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면서, 검사들이 나와 가지고 김건희 불기소하면서 무려 4시간 동안 PPT 100장 띄워 놓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했어요. 국민들이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시겠습니까?

또 올해 1월과 3월에 윤석열이 구속되고 석방되는 과정에 즉시항고를 안 하고, 이러면서 검찰이 그렇게 위헌을 떠들면서…… 윤석열 석방에 무려 3시간 보태 가지고, 윤석열 즉시항고 안 하고 바로 석방해 줬어요. 국민들은 검찰도 내란 공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첫째, 검찰이 과연 이번 12·3 내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검이 20일 만에 수사를 해낼 수 있는 것을 검찰은 도대체 6개월 동안 뭐 했는지, 명태균 사건, 모든 사건에서 검찰이 한 게 없습니다. 이것 진상을 확실히 밝혀서 저들이 과연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내실 용의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어쨌든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법무부가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의 의지에 따른 그런 과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성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는 직접수사에 나서 가지고 조서 보고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고 왜곡하려고 하고 봐주기 수사하거나 아니면 보복적인 수사를 하거나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윤 위원** 옳으신 말씀인데요. 과거에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면서 정말 이런 조작수사를 했던, 표적수사를 했던 검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과를 물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건진법사에게 인사 청탁한 검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직 뭐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래요? 아까 검찰에 대한 확규택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추측이다’, 특검에 검사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 ‘추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측이라고 생각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이건 대통령실이 그것 관련해 가지고 관여했다고 하는 그런 확증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윤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질문은……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성윤 위원** 김기표 위원의 질문의 취지는 ‘검찰에서 야당에 제보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장관후보자님께서 ‘추측일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과규택 위원님의 대통령실에서 관여해 가지고 과건검사를 조정한 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러면서 추측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검찰의 인사 또 보직 이동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는 것,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후보자님, 오전 질의에서 후보자님은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로 근무했던 영리행위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유예기간, 그 법의 부칙에서 정하는 6개월 내에 그만뒀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송석준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국회법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3항에 보면 영리업무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신고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영리업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신고 안 하셨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게 겸직으로 신고를 하셨어요. 그때 겸직으로 신고하신 것은 기억나시나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이게 오래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한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국회사무처의 그 당시 기록에 아무래도 후보자님이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윤리위원후보셨고 그래서 아마 절차도 잘 지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하신 게 겸직업무에 관한 신고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따져 왔던 거고요. 그래서 겸직의무를 위반한 그런 게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겸직의무 그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아까 해명하시기를 영리업무 종사로 봐서 문제없었다 하셨지만 또 역시 이걸 보더라도 국회법 29조의2 제3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 법무부장관님은 서민들의 아주 사소한 그런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엄정히 관리해야 될 분이 본인이 이런 국회법상 명시적 규정을 위반했는데도 아까 저한테 오히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해명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 여기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겸직 신고를 해 가지고 ‘이건 겸직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결정을 받았고 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걸 정리하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문제가……

○**송석준 위원** 그런데 안 했잖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송석준 위원** 겸직 신고했는데 거기서 그랬어요. 이것 문제가 되니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것을 임의로 겸직이 아닌 영리업무 종사로 해석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영리업무……

○**송석준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3개월 이내에 그만두셔야 되는데 3개월 이내에 그만두시지 않고 2개월이 넘도록 계속 고문직을 유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겸직의무를 위반하고 위법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걸 해석을 달리해서 가지고 ‘내가 일반 영리업무를 보고서 6개월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했다’ 했는데 역시 그것도 규정에 의하면 신고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니, 위원님……

○**송석준 위원** 이렇게 위반한 것은 솔직히 인정하시고 사죄를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변명하시고 둘러치면 되겠어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이는 대로 겸직 신고를 해 갖고 이걸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아 갖고 통보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안에 완전히 정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했거든요.

○**송석준 위원** 아니지요. 국회법 부칙 보세요. 이 법 시행 당시 의원의 경우에는 이 부칙 조항에 의해서 3개월 이내에 그냥 휴직하도록 돼 있어요. 그만두도록 돼 있어요. 아니, 이렇게 법률 조항을 임의로 해석하시면 어떻게 법무부장관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니, 임의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이것은 겸직의무 규정을 두면서 국회법 부칙 조항에 3개월을 못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다시 기산하는 게 아니고 이 법 시행 당시 의원에 대해서 바로 겸직에 관해서는 3개월 또 신고 대상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영업행위는 6개월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걸로 핑계 대셨지만 실제 신고의무를 어기신 거지요.

이게 중대범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은 징계 대상이에요. 그래서 신고의무를 안 하시면 윤리특위 징계 대상인데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규정을, 법무부장관님은 정말 작은 규정이라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시행규칙, 시행령까지도 엄중히 봐야 되는데 이걸 국회법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시고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사소한 거라도 이제는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각오를 좀 가지셔야 국민들의 법질서가 유지가 되고 대한민국 법질서가 살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정중하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과해 주시고.

또 앞에 계시는 분들 자꾸……

(「질의가 전제가 잘못된 거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잘못됐다고…… 공부 좀 제대로 하세요, 국회법.

다시 한번 할 말씀 해 보세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니,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송석준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더 하셔도 좋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니,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럼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제가 살면서 그러려고 노력해 왔고요. 다만 그 당시 절차는 제가 명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당시 저희가 검직 여부를 갖다가 묻기 위한 검직 신고를 했었고 그다음에 무보수로 계속할 수 있냐 그런 신고를 해서,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일단 그렇게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리업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6개월 안에, 정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6개월 안에, 법의 정리하는 기간 안에 정리를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관련해 갖고.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하라고 명시적 규정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춘석** 정리해 주시고 필요하면 재보충질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위원장 이춘석** 아니, 재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정리하시고.

○**송석준 위원** 신고하는 것 어겼는데 사과를 안 하시고 자꾸 변명하시면…… 제가 또 따질게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니, 위원님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유감스럽게……

○**송석준 위원** 뒤에서도 공부를 좀 똑바로 시켜 드리세요.

○**위원장 이춘석** 자, 정리해 주시고……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춘석** 다음 질의로 신동욱 위원님……

○**송석준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말씀 더 하셔도 돼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춘석** 아니, 이렇게 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한 말씀 더 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 이춘석** 아니,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충질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끝난 후 잠시 한 20분 정도 휴정하겠습니다. 사실은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가 한 20분 동안 시간에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저도 지금 국회법을 보고 있는데 하도 개정이 많이 돼 가지고 어디어디가 정리됐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재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해 주시면 그때 후보자님께서 다시 답변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장관후보자가 되셔서.

돌아보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명사가 아니었는데, 저는 언론계에서 쪽 부침을 봐 왔는데 혹시 언제부터 이렇게 법무부장관이 주목 대상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되면서부터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개혁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검찰이 우리 편이면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상대방 편이면 개혁 대상이다 이런 관점으로 검찰개혁을 하면 결국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국회에서 오랫동안 이걸 지켜보신 정성호 후보자님이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신문 보도를 보니까, 동부지검장 임은정 검사 아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신동욱 위원** 혹시 박정훈 대령 또는 백해룡 경정 불러서 차담회 하겠다고 해서 후배 검사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라는 기사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기사는 봤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런 분이 제가 보기에겐 전형적인 정치검찰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개혁을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나는 정치검찰이다’라고 선언하듯이 하는 것은 적절한가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해당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동부지검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들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신동욱 위원** 제가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화면 하나만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왼쪽 노란박스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정말 저희가 어렵게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따라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게 되면 저 흐름도대로 저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저희가 정말로 걱정스러운 겁니다. 이 안에는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재산권과 이런 모든 것이 보호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복잡해져서 우리도 사실은 이것을 정말 그리느라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복잡하

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그저께 법무부차관에게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1차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습시다만 결론적으로 법무부 보고를 보면 사건 처리 절차가 매우 복잡해져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의 3개월 초과한 건수가 20% 후반대였는데 그다음부터는 최고 60%까지 3개월 이상 수사 진행된 경우가 늘었다.

두 번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부가 있었는데 합수단 폐지 전에는 월평균 기소 인원이 20명이었는데 합수단 폐지기간, 그러니까 2년입니다. 2년씩 잘라 있습니다. 6.2명으로 줍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합수단을 복원했더니 다시 18.1명으로 늘고 추정보전액이 2조 551억 원, 거의 5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혹시 서울중앙지검이나 법원 앞에 가 보셨습니까, 최근에?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최근에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신동욱 위원**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요. 대부분이 요즘 사이버범죄라든지 재산권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우려하는 가장 큰 것을 보면 사이버 사기와 재산범죄의 1건당 사건 처리기간이 수사권 조정 전보다 38일, 그러니까 5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산범죄라는 것은, 우리 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검찰이 아무리 미워도 이 사건 처리를 이렇게 지연하게……

○**서영교 위원** 누가 말한 거예요?

○**신동욱 위원**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저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노정된 문제보다 훨씬 더 수사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와 생각을 같이하신다면 이렇게, 지금 4개 법안을 보면 민주당이 주도해서 법안을 내놓고 법사위에서 처리를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지금이라도 다시 사법개혁, 검찰개혁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두텁게 보장이 되고 재산권이 보장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없어질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관점에서 법무부장관님이 조언을 해 주시고. 또는 이런 경우에 지금이라도 다시 여야가 마음을 합쳐서 사법개혁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사안들이 잘 참조되어 가지고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수사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또 사건 처리 지연의 문제 또 최종적으로 수사가 피해자·고소인·고발인, 이분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라 범죄로부터 피해를 안 당할 권리 또 범죄의 피해로부터 복구되어야 되는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잘 참조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예, 하여튼 재산범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

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신동욱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지난 대선에도 문제가 됐지만 사법의 정치화는 법리적 판단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또 정치의 사법화는 입법부의 의사결정 기능을 약화시킨다, 이런 현상을 방치한다면 삼권분립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후보자님의 과거 발언을 보면 ‘내심을 판사가 유추해석해 판단·판결한 것은 문제다.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 판단’ 그다음에 ‘법률 명확성의 원칙, 특히 표현의 자유라든가 모든 선거운동의 자유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행위 개념이 너무나 모호하다.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의 운명이 검사와 판사 손에 맡겨지는 것’이라며 ‘이미 법조 내부에서나 정치권에서도 행위 개념의 모호성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제가 작년에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무효형 기준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규정으로 법안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고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의 기준이 되는 벌금형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 제가 법원에서 오랜 재판 경험으로 특정인을 위한 법안도, 여야 문제도 아닌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발의한 법안입니다. 저도 공직선거재판을 많이 해 봤지만 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또 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하는 게 요즘의 선거재판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똑같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또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역대 한 번도 형사상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그런 법조문도 없고 다만 주에 따라서 2~3개 주에 명예훼손 처벌규정이 있는데 한 번도 기소되지 않은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또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똑같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있는데 지금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 또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그런데 다시 또 공직선거법에 그보다 훨씬 엄격하게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을 두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지금 국민주권 시대고 국민이 선출한 당선인들이 재판을 통해서 또 검찰의 기소를 통해서 선거직이 박탈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더

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중요한 대통령선거에서 사법의 정치화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의 논란을 끊기 위해서는 제가 발의한 대로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자체를 삭제하고 선거권·피선거권의 결격사유가 되는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되고 또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되어야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일반화됐을 때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하고 또 선거 결과 왜곡까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행위라는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판단 기준에 맡김으로써 많은 정치적 논란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이 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의원님들이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특히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 100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제가 과거 법사위에서 양형위원회 국정감사 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벌금 100만 원으로 당선무효 시키고 자격을 박탈하는 게 옳바르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그 당시 양형위원장께서도 ‘국회에서 의원들이 입법적으로 결단한 거다.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줬습니다.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도 이것은 여야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 정도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저희도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의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파견하는 것도 역시 대통령 권한 아니에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에서는 파견하는 또는 인사 하는 감사에 대해서 신상 감증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너무 아까워요.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저보다 더 똑똑한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이 폐부를 찌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찰, 대한민국 검찰을 누가 믿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통일교 이런 문제를 윤석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했으면 특검 왔겠어요? 저는 쿠데타도 안 왔다고 봐요.

이런 내란 동조 검찰을 특검으로 내란 세력을, 김건희 세력을 조사하는 거기에 파견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당연한 것을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어물어물 답변하면 안 됩니다. 소신껏 하세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니, 어물어물한 게 아니라 제가 답변을……

○박지원 위원 아니, 제가 들을 때는 어물어물했어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죄송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보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건희·최은순 모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 된다는 일은 양젓물도 먹어 버려요. 양젓물도 큰 것만 먹어요. 이런 사람들을 검찰이 지금까지 방치한 죄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윤석열도 보세요. 아까 교정 당국에 얘기했지만 자기는 계엄군 보내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왜 교정청에서는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되고 피의자로 구속된 그 사람 하나 인치를 못 하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잘하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5·18 피해자는 지금 현재까지 파악되고 신고된 사람은 5807명입니다. 이 중에서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 판결로 정신적 피해자도 보상을 해라 해서 여기에 신고된 사람들이 약 3000여 명 돼요. 아직 못 찾고 있는 사람들도 이삼천 명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법원에 소송을 하면서 LKB를 변호인으로 선정한 것은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다른 변호인 또는 지방에서 하신 분들은 보상이 적어요. 그 차이가 2~4배란 말이에요. 이게 적당합니까? 안 되잖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김승원 전 법사위 간사가 지난 국정감사 때 대법원 행정처장한테 질문해서 대법원에서 받아 온 것은 형평에 맞게 국가는 보상해야 된다. 그 후로 소송을 하는 사람은 LKB 기준의 보상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또 시효가 지났다고 약 이삼천 명이 못 하고 있어요. 이래서 양부남 의원이 행안위에 법안을 냈어요, 시효를 연장해 달라.

연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런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 또 피해 본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그런 점들이 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위원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장관 말씀대로. 그런데 윤석열 법무부에서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행안위 소위원회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을 형평에 맞게, 대법원 행정처에서 얘기한 대로, 서면으로 제출한 대로 보상이 되게 하려면 첫째, 법무부에서 반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시효를 살려 내야 돼요.

그리고 삼천여 명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고를 받고 또 더 중요한 것은 2~4배 적게 받은 그분들도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 말씀의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관련법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극 파악해서……

○**박지원 위원** 그것을 좀 파악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시효를 살려서 피해자 이삼천 명을 구출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과거에 LKB 수준의 2~4배 덜 받은 그러한 피해보상자들도 형평에 맞는, 법원행정처에서 밝힌 대로 보상을 받도록 법무부에서 도와주십시오. 아시겠어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후보자님, 특검을 두는 이유가 뭐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기존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어떠한 이유든지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개……

○**장동혁 위원** 결국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 대부분의 특검은, 결국은 정치적 사건에서 지금까지 특검을 해 왔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장동혁 위원**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그래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통치권자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특검을 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을 임명하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서 특검에 어떤 검사들을 파견할 건지까지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은 받고 이 사람은 받지 마라라고 한다면 그 수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려면 특검을 뭐 하러 둬니까? 인사를 통해서 원하는 검사들 한곳에 몰아넣고 그분들이 수사하게 하면 되지요. 그것 하지 말라고 특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그런데 예를 들면 특검에 어떤 검사를 파견할지 말지를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그 답변에 대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일단 대통령의 인사권의 범위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동혁 위원** 특검에 어떤 검사를 파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대통령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정확하게 어떻게 특검에서 요청을 했고 하는 등의 과정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파견검사의 이동과 파견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의 권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우를 바꾸어서 이런 특검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원래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되는 조항까지 뒀지 않습니까? 그 특검이 임명됐는데 그러면 그 특검에 파견될 검사를 누구를 파견할지 말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파견받고 이 사람은 파견받지 마세요’라고 했다면 그것도 대통령의 임명권, 인사권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정확하게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장동혁 위원** 아니, 결국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야당에서 아무 문제 없고 특검은 어쨌든 국회에서 추천하는 대로 임명됐으니 거기에 어떤 검사를 파견할지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했으니까 ‘이 검사는 파견받고 저 검사 파견받지 말고 결국 파견 명단 딱 줘서 이렇게 파견받아 가지고 수사하세요’라고 하면 그 당시에 야당이 가만있었을까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운용되고 있는 특검의 파견검사에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는 설부른 것 같습니다.

○**장동혁 위원** 특검을 법률상 누가 임명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장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든 아니면 다른 제3의 기관에서 추천을 하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임명 절차가 특검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이고 그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특검이 수사를 할 때 정치권력,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통치 권력자로부터 중립적으로 독립해서 수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그 특검에 파견될 검사를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 넣고 이 사람 빼라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현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장동혁 위원** 아니, 감사원장에게 그런 질문 했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돕는 거냐?’. 그렇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질타를 했습니까? 그 취지가 감사원의 운영을 잘, 중립적으로 감사를 해서 잘하는 것이 결국은 국정 수행을 돕는다는 취지였다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해야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돕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특검의 검사를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인사권의 범위 내다? 저는 정말 오늘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까지는 제가 수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 인사권의 범위 내다, 그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저는……

○**위원장 이춘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춘석** 박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내란 세력, 김건희, 채 상병, 이 사건을 수사하는 3대 특검이 파견받는 검찰이 그러한 내란 동조 검찰, 김건희 동조 검찰, 채 상병 동조 검찰, 이 사람들이 특검에 와서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고 검증을 해서 보낸다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아니에요.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혁 위원** 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저는 특검은, 어떤 사건이든 특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대통령이 특검의 임명, 검사 파견에 관여할 수 있다, 저는 그 주장에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고. 박지원 위원님이 제 질문에 반박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석** 자, 보충질의 마지막입니다.

김용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후보자님, 예를 들어 내란 특검에 내란에 관련된 검사가 파견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것을 통해서 특검이 스스로 철회하고 다시 추천 요구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문제 될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은요. 특검이 끝까지 고집부렸는데…… 부딪혔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철회하고 다시 신청하는 것은 전혀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 공소취소 문제가 계속됐었는데 과거, 과거도 아니지요, 얼마 전이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관련 사건 전부 공소취소했던 것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미국 법무부는 제가 기억하기로 1974년 이래 한 세 번 정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취소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 327조 1호에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는 공소기각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재판권이 없다

는 얘기에요. 그러면 적어도 현직 대통령인 기간 동안에는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면 헌법학계 학설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주장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어차피 관련해서 공소취소 같은 경우는 물론 새로운 범인이 발견됐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던 게 명백하다든가 하면…… 어쨌든 법률상 공소취소의 사유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가 불법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다든가 기소권 남용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저는 해당 공소시효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점은. 다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PPT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위법한 시행령, 다시 말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무한정 확대시켰던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조치하겠다’라는 답을 하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대 범죄를 무한정 늘렸지요. 늘리면서 또 뭘 넣었느냐? 위증·무고 이런 것까지, 경제·부패랑 아무 상관없는 위증·무고까지 넣어서 정말로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 당연히 조치해야 되는데……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얘기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검 예규에 검찰청법에 따라서 관련 사건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이게 범인, 범죄사실, 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면 직접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서 아무나 하나 걸러라, 무조건 직접수사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진짜 무한정 늘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검 예규, 이것 비공개 처리했어요. 제가 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것 빨리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이걸 비공개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빨리 주십시오.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 보여 주시지요.

검사 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기존에는 검사가 잘못하면 법무부장관이 감찰도 못 하고 징계 청구도 못 했습니다. 오로지 검찰총장만 가능했지요. 최근에 검사징계법 개정해서 이제 법무부장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실제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그동안 이렇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수없이 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이렇게 정치질을 해 왔어요.

보십시오. 탄핵 관련해서는 ‘하나의 비열한 목적을 위하여 주어진 대로 해야 할 일’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속한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저들의 사악하고 뻔뻔한 형

포는 반드시 응징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현직 검사의 말입니까? 일개 행정공무원이 이런 소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징계하십시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이게 비공개 글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김용민 위원** 비공개 글이 아니라 이런 글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매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또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발언 남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법무부가 10년 동안 단 2건의 정치 중립 의무 징계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함부로 위반하면서 민주당이 무슨 사악한 적인, 거대 악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들끼리 쓰고 깔깔대고 있는 겁니다. 이것 적절한 조치 취해야 됩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혹시 이것 아십니까? 징계시효가 3년밖에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내란에 협조한 검사들에 대해서 처벌도 있어야 되지만 징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찰 과거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 드러내야 되는데 징계시효가 매우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사징계법에는 아직 탄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겨 둔 것입니다.

탄핵시효가 없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김용민 위원** 그래서 탄핵은 현재 남아 있는 것이니 조사해서 징계시효 지난 것은 국회에 탄핵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분명히 저희들이 의심스러울 때는 감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희가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석**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들만 3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관련해서 후보자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핫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공소취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만일 수사 조작이 있거나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된다고 하면 공소취소나 수사 검사를 징계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정확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장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거나 또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증거라든가 증인들의 진술이 조작되거나 강요에 의한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면 당연히 공소취소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공소취소 사유는 법리상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지만 명백하게 공소권이 남용됐다고 하면 해당 검사가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춘석** 알겠습니다. 저는 법과 원칙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재보충질의 원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편의를 위해서……

○**조배숙 위원** 순서대로 하세요.

○**위원장 이춘석** 알겠습니다. 야당 위원은 전부 다 드셨기 때문에 장동혁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쪽 가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원래 전체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영교 위원** 종이에 있는 순서대로 그냥 해 주세요.

○**위원장 이춘석**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배숙 위원** 예, 제 순서를 뒤로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조배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사람만 하기로 해서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공부 잘하는 순서예요.

○**조배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조배숙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할 때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이 필요 없다, 인사개혁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 얘기는 이 검찰개혁이 논의되는 상황이 수사·기소가 분리되지 않아서가 아니고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인사제도에 있다, 인사권을 쥔 정치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정치사법화했기 때문에 정치권에 책임이 더 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수사기관들, 경찰청이나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 이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또 권력이 비대화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도 또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악순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기관의 이 인사 문제를 중립적인 인사기구로 해서 독립성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였고 또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뜻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 아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충질의 때 언급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아까 플랫폼 PPT 다시 띄워 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빨대사회’라는 책 읽어 보셨느냐고 제가 물어봤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직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조배숙 위원** 모성준 판사라고 지금 사법연수원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이 책에서 ‘검정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때문에 조직적 사기범죄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현직 판사 얘기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하면서 그런 실례들을 보고 이런 책을 쓴 겁니다.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이 개정됐는데요, 이 조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피고인이 동의할 때만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공범이 있을 때 범죄의 우두머리가 혐의를 부인하고 또 부하들이 진술을 거부하면 아무리 수사 열심히 해도 무의미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특히 보이스코핑 같은 그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함정수사 같은 게 필요한데, 함정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비가 필요한데요 작년 말에 검찰 특활비·특경비가 국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다,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정 때 이게 부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대조건을 걸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개혁 법안, 그 폐지 법안이 완성될 때 쓰는 것으로.

그러면 결국 이 예산은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법무부에서야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현재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위원님들께 계속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검찰개혁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의정활동 하신 내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형태든지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되는 게 좋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또 이 문제가 계속된다고 하면, 이 상황이 빨리 종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관련된 수사기관도 여러 가지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오래될 겁니다.

○**조배숙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국민들의 피해가 늘어나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묶어 뒀서, 특활비·특경비를 묶어 놔 가지고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 개혁 법안 진행은 진행대로 하고 현실적으로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어쨌든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특히 과도기적인 또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이 자칫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국민들 보호에 소홀함이 없게 더 분발하고 더 세밀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예, 의사진행발언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인사청문회 질문의 성격상 질문과 답변을 합치면 좀 시간이 필요한데 3분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질문 답변이 끊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이번 텀부터 5분으로 하시든지 저녁시간에 하는 것은 5분으로 하는 것을 여야 간사님 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여야 간사 간에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재보충질의 3분으로 합의한 사항을 제가 그대로 이행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배우자 재산이 는 내역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봤는데요. 보니까, 아실 것 같아요. 2020년도에 19억 7000만 원 정도였는데 5년 뒤인 2024년도에 34억 3000만 원이면 14억 6000만 원 정도가 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란색이 소득 신고가 된 부분입니다. 2020년도에 1억 8000으로 좀 높게 소득 신고가 됐고 나머지는 금융소득을 다 포함해 가지고 사실 2000만 원, 7000만 원 단위로 하면서 실제 신고된 내역은 3억 60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11억 원 정도의 재산 증가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아까 설명 들어 보니까 배우자께서 만약에 그림을 판다면, 그림을 팔면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지금 이 11억 원이라는 금액도 아무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으니까 과연 어디서 돈이 나왔느냐 하는 의문이 일단 들고요.

저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2021~2022년도에는 8억 4000만 원이 한 해에 늘었어요. 사실은 저 해에 많이 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무런 자료 없이 이게 설명도 안 될뿐더러……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정치를 하기 전에 변호사 시절부터 저의 수입을 저의 배우자가 대개 관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또 제 명의로 된 재산이나 저희 부부 공동체의, 저희 부부 사이의 공유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제 재산 신고, 국회에 재산 신고한 것, 공직 재산 공개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시기에 제 명의의 금융자산은 줄었을 겁니다, 대부분 그랬고.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후보자 재산이 조금 줄면서 저게 늘었는데 배우자 간에도, 그냥 모아서 쓰신 건 알겠는데 배우자 간에도 증여 문제가 생기잖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런데 현실적으로 배우자 간에 이런 자산, 금융에 관련해 갖고서는 세무서, 국세청에서도 그걸 증여로 보고 과세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지금 14억 6000만 원도 그렇고 보면 전시회를 두 번 하신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한 번은 양주시의회에서 2021년도에 전시회를 하고 2025년도에는 국회 아트 갤러리에 전시를 해요. 그런데 국회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규정이 있어서 장애인 또는 청년들 위주로 먼저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여서 사실 그림값이라는 게 액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판매됐을 때의 문제점도 사실은 많이 지적들을 하거든요. 이게 얼마가 적정 가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 때문에 매매가 의심되기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저의 처가 미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대개 대학원 마치고 나면 개인전을 한 번씩 하는데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개인전을 딱 한번 했습니다. 국회에서 한 경우도 단체에 딱 한 점 출품했던 거고요. 양주시의회에서도 저의 배우자가 주최한 개인전이 아니라 지역미술협회에서 했을 때 한 점을 출품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술품 판매 관계 관련해서는 딱 두 번,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조금 두 번 인가 판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주진우 위원** 나머지는 판매한 게 없고 그냥……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정치, 인사청문회 때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지만 저의 배우자는 피해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남편이 정치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싶어도 그림 판매를 제가 그때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의 경우도……

사실은 그 당시에 그림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갖고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그림 판매는 안 된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왜냐? 예술작품에 대한 평가가 매우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정치적인 위치 때문에 비싸게 판 거고 자칫 그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라는 걸 주지시켰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후에는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판매를 못 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위원장 이춘석**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장관님, 변호사시험 과목에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이 있지만 또 수험생이 선택하는 전문 과목이 있습니다. 7개의 전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것인데 변호사 합격 여부를 결정할 때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합해서 총점을 내서 합격 여부를 좌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목 중에서 좀 점수가 잘 나오고 학업 부담이 없는 걸 중심으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개 과목 중에서 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이 세 과목은 선택이 많아서 80% 가까이가 몰리는데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이 네 가지 과목은 지망자가 별로 없어서 지금 20%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가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조가 고착화돼 버리면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만들었던 로스쿨제도 본래 취지 자체가 퇴색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과목을 잘 신청하지 않다 보니까 일부 과목은 폐강이 되기도 하고 해당 분야의 교수 임용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 학문의 토양마저 위협을 당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해결 방법이 뭐냐? 선택하는 그 전문 과목에 대해서는 총점에 반영하지를 않고 법조윤리 시험처럼 패스·페일(pass·fail) 방식, 그러니까 통과 여부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서 다양하게 듣고 싶은 과목들을 듣게 만들어 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로스쿨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로스쿨 제도가 오히려 기초법학 교육을 굉장히 황폐화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들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이 목표니까 오히려 일반적인 법학 교육, 일반적인 법학 교육에 있어서 법이론의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최근에 굉장히 다양화되고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국제관계 분쟁에 있어서 기본적인 법학 이론의 발전이 굉장히 필요한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과목 선택에 있어서도 쉬운 과목 위주로 되다 보니까 나머지 과목 자체는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스·페일 방법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갈 건지 이걸 학교와 의논해 갖고 꼭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택 위원** 후보자님, 2023년 4월경에 방송에 출연해서 가지고 이른바 민주당 전당 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송영길 당시 대표는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기름값, 식대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실언을 한 저의 불찰을 반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하셨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광규택 위원** 지금 생각하시기에 이 발언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닙니다.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어쨌든 300만 원 관련해서는 송영길…… 이게 여러 가지 재판이 2개 나눠서 진행되는 데 판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회 당내 경선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돈이 지급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 또 그것을 그런 정도로 표현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규택 위원** 오늘 질의 중에 쟁점이 된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 위원들이 물어볼 때하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의 질문에 대해서 그냥 상대방 위원이 듣기 좋은 대답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공소취소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물어봤을 때는 공소취소를 하도록 지휘를 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공소취소를 안 했다고 해 가지고 검사를 징계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셨다가 또 민주당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검사가 알아서 공소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쨌겠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신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3대 특검에 대해서 파견검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관여하는 문제, 제가 분명히 질문했을 때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처음에 말씀하셨다가 또 민주당 위원님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했더니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일 수 있고 후보자님께서 정치적인 경험이 굉장히 긴 분이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 듣기 좋게 하는 그 말씀, 뭐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배울 점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이나 능력 중에서는 저는 굉장한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질서의 확립, 정치적인 중립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떤 본인의 소신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소속되어 있던 정당하고는 조금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방향이 맞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순간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좀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법무부장관이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시절들 이것을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 출신 현역 국회의원들께서 법무부장관 할 때가 제일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하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제 개인적 유불리를 갖고 소신과 원칙을 바꾸지는 않았습다. 오늘 말씀하신 사안에 관련해서는 혹시 그런 점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아까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건진의 법당에 갔더니 이 일본 신의 법당이 있더라.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 한번 봐 주세요.

국민의힘도 봐 주세요. 국민 여러분 다 봐 주세요. 다 보시고 충격을 받았을 텐데 저런 법당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비밀의 방처럼.

○**곽규택 위원** 이것 특검 수사 중인데 어떻게 나왔어요, 사진이?

○**서영교 위원** 이것 중앙일보에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거기 가 보세요, 한번. 저것도 가려 주고 싶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천공 사진 한번 올려 보세요.

천공이 저렇게 연결하면서 뒤에 일본 신을 놓고 연결을 해요. ‘아마테라스 오오카미’ 이게 뭐니까? 저희가 의문을 품었던, 윤석열은 왜 그렇게 일본에 가깝고 왜 그렇게 극우·친일 이런 사람들을 쓰고 있는지 너무 의문이었어요. 이제 짹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철저히 수사할 것을, 법무부장관이 되면 지휘하십시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지금 건진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저희 법무부에서 협조할 게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인 윤희숙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언석, 거취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전한길을 불러다가 ‘윤 어게인’, 강의하는 곳에 가서 듣고 박수 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윤 어게인. 와, 이제 끊을 때도 됐는데 질질질질 못 끊고 피가 그쪽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이 부분도 내란 동조, 지금도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세력들 확실히 끊어 내게 법무부장관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이제 신청합니다, 7월 21일부터.

혹시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받으라고 안내받아 본 적 있으세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것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저걸 띄웠는데, ‘민생회복 신청하세요’,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저렇게 해서 신청하면 되는 거지요?

장관님, 제가 왜 물을까요?

오늘 국민께 제가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저런 것 클릭하시면 보이스포싱, 스미싱 당합니다. 국가에서 보내는 문자, 카드회사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링크가 절대 없습니다.

그다음 것 넘겨 봐 주세요.

카드사에서 보내는 건 저렇게 카톡이나 이런 것으로 ‘홈페이지에 와서 신청하세요’, ‘동사무소로 가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대로 링크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민생쿠폰 링크가 문자로 왔어요. 이건 100% 사기고, 이것 다시 한번.....

어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모르셨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몰랐습니다.

○**서영교 위원** 왜냐하면 잘 몰라요. 모르시면 안 돼요. 오늘은 법무부장관이 나서서도 그렇고 국가가 나서서도 그렇고, 언론이 어제 보도하더라고요. 전국에 알려 주셔야 돼요. ‘와’ 좋아서 누르면 그날로 피싱당하고 돈 뜯기고 핸드폰 다 털리고 사람 사망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사람들에게 고통이 될 수 있는 잘못된 사기가 있으니까 그것 법무부장관으로서 모든 곳에 지시해서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각별히 유념하고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깜짝 놀랐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석**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안 중 하나로 외국인 주민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고 있는 실질적인 구성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도 이 점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은 다음 표를 보듯이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 간 충돌·중복, 행정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주민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은 246만 명, 전체 인구의 4.8%에 달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산업을 지탱하고 저출생에 대응하는 핵심 인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정책은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은정 위원** 화면 올려 주세요.

지난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청으로 승격하려고 했었습니다. 후보자님 또한 지난 2019년에 이미 이민청 설치를 주장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후보자님?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하지만 법무부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는 그간 외국인을 통제와 관리가 필요한 문제라는 인식으로 접근해 왔기 때문입니다.

화면 올려 주세요.

다음 사건들, 후보자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은 일명 새우 꺾기라고 불린 보호 외국인의 인권침해 사건이고 오른쪽은 외국인 아동은 구금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법무부의 말과 다르게 이렇게 3살짜리 아이가 구금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언론에 겨우 노출된 것이 이 정도인데 실상은 어떻겠습니까?

이민청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뒤에도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운운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만 국민들에게 일으켰습니다. 불과 최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님께서 법무부에 확인해 보시면 그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보도자료 제목에서 보듯이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이 외국인 체류 질서의 전부인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법무부에 이민청이 생긴다 한들 이민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되겠는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법무부에서 이민청을 포기하고 국무총리 직속의 이민처를 신설해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 삼고 부처 간 조정과 지방정부와의 협업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한번 좀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실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가 전체 정부 부처 업무의 기획이나 조정이 핵심적인 임무인데 이민청이나 이 관리 업무가 실질적인 집행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법무부가 그동안 이민 관련한 정책들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범정부적인 차원의 어떤 기구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다만 어디에서 지휘·감독을 할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여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후보자님,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아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김기표 위원 70년대, 80년대에 국가가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다가 수용자 수천 명 강제 수용하고 감금, 폭력,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를 자행한 국가 폭력 사건이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형제복지원 피해자 600여 명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이 40건 넘게 진행 중입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2025년 3월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요. 그러면 이게 잘 아시겠지만 개개인별로 손해배상을 또 청구해야 하니까 여러 사건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40건 정도가 계류되어 있는데 시차가 있으니까 지금 일부 사건은 항소심 판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2025년 6월 18일 날 부산고법에서 판결이 6건 났는데 7월 9일 상고기간 마지막 날 상고장이 제출됐어요. 그런데 일·이십에서 다 피해보상을 인정받은 피해자 홍영식 씨라는 사람이 상고기간 마지막 날 다시 상고장 제출한 것을 보고 낙심해 가지고, 낙담해서 10일 날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고 길을 나섰다가 크게 머리를 다쳤고 11일 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왜 구체적으로 거론하냐면 실무에 있어 보니까, 지금 국가를 대표해서 소송을 하는 건 법무부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가 무분별하게 결과가 확실한 것에 대해서도 항소, 상고를 하는 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지금 조속히 손해배상액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또 무한정 기한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지금 당장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너무 또 좋아하는 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율이 연 15%인데 어디 가서 15% 돈을 받겠어’ 이러면서, 왜냐하면 뻔한 거거든요. 결과가 뻔한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 상고를 해 놓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의 배임죄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사례가 너무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논란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차제에 장관이 되시면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례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혹시 배임죄 때문에 무분별하게 상고하는 이런 거는 좀 방지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 소송도 한번 살펴보셔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감하게 장관님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거는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면 배임죄 문제도 좀 줄어들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 때 한번 챙겨 볼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과거에 변호사 업무를 함에 있어서 너무나 명백한 상고에 대해서 검찰에서 송무 지휘를 하면서 해당 공무원에게 무조건 항소, 상고하게 하는 그런 관행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국가 입장에서는 이자가 증가되어 가지고 비용이 더 듭니다.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이 지연되기 때문에 좌절하고 또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 면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심사기구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바로 거기서 종결시키도록 하는 게 또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표 위원** 잘 검토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위원장 이춘석**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법무부장관이 되더라도 검찰에 공소취소 등 특별한 소송행위를 지휘할 계획이 없다고 확인을 해 주셨습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박준태 위원** 그래서 제가 ‘검사가 알아서 공소취소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적절한가, 장관께서 모른 척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검사가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상식에 부합하는 말씀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인 민주당은 그것과는 온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됐지만, 며칠 안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7월 10일에 발의된 법을 보면요,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뒀습니다. 이 법 47조를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공소취소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결정이나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소취소를 직접 할 것이 부담되니까 뭔가 새로운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명분을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렇게 오인받기 좋다는 겁니다.

아까 여기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는 이제 발의된 시점이고 이 법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를 했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어쨌든 이게 국회에서 논의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런데 때마침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조작된 사건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당내 특위까지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인 주장으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조작·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빌드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명백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까지 염두에 둔

활동으로 저희는 해석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좀 중심을 잘 잡아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답변은……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어쨌든 헌법 84조 해석 관련해 가지고 소추의 재판권,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소기각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공소취소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공소가 잘못됐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해당 검사가 공소취소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공소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면 또 취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거는 해당 검사가 신중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글썄요, 검사가 그것을 정치적인 상황적 고려 없이 본인이 스스로 이견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까요? 그런 부분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까 말씀 주신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 일선 검사한테 책임을 떠미는 듯한 뉘앙스로 조금 의미가 바뀐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어쨌든 공소취소 사유 유무야 사실 객관적으로 어떤 사유가 증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춘석** 이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운 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안 하시고요.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 안 계시고.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후보자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 의문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배우자분이 가정주부시고 2020년, 2021년경에 전업 화가를 잠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대개 저도 재산등록을 해 보면 재산이 많이 느는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늘거나 아니면 상속을 받거나 이런 경우인데 유독 다른 분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배우자분의 현금 예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흔들립니다. 지난 10년을 보면 2015년에 7.8억이었는데 2016년에 4.8억이 늘고 2017년에 1억이 늘고 2018년에 또 2.8억이 늘고 쭉쭉 가다가 2023년에는 7억 4000이 느는데 7억 4000이 는 이 시기에 후보님의 예금이 6억 정도가 줄었더군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는 증여를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또 청문회 답변 자료를 보면 ‘증여를 한 것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부분에 보면 제가 보기에 그게 아니면 투자를 하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주식 투자 같은 것을 했으면 이렇게 1년에 몇 억씩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건 정말 대단한 고수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도대체 이 돈이 왜 매년 4억, 3억, 1억 이렇게 막 늘었는지 좀 개괄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제가 종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 부부가 재산을 사실상 나눠서 관리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예금계약을 해지한다든가 또는 찾을 때 제 명의로 돼 있으면 제가 가니까 불편해 가지고 다 아내 명의로 옮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적으로 본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저의 세비 일부 저축 문제라든가, 제가 또 일련의 임대 소득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예금의 이자 증가분들 이런 것들 고려한 그런 정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제 명의로 있던 금융자산을 아내 명의로 옮겼을 때 그게 증여냐 아니냐 얘기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동욱 위원** 10년에 6억 원 정해져 있는 금액 아니에요. 10년에 6억까지만 증여를 할 수 있는데 후보자님 말씀에 따르면 2015~2024년 17.1억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증여를 하셨다고 지금 표현을 하시고 또 청문자료에는 증여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러니까 저희도……

○**신동욱 위원** 그러면 10년에 6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억은 증여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지간이라도 증여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국세청에서 다 합쳐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세금을 안 내신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에 금융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례가 없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요, 10년에 6억이고 자녀는 10년에 5000만 원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는 또 바로 제 명의로 옮겨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렇게 관리해 왔습니다. 이게 제가 수입이 세비라든가 임대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 아내의 기여가 크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동욱 위원** 아니, 지금 후보자님 명의로 옮기면 또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명이 안 돼서 그냥 후보자님 돈을 배우자에게 보냈다는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10년 동안 17억씩이나 건너갔다라는 게 제 기준으로 보면 후보자님이 소득의 증빙을 안 주시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존경하는 위원님, 국회 재산등록한 신고를 보면 아내의 재산이 는 것만큼, 배우자 재산이 는 것만큼 제 금융자산이 감소돼 있거든요, 사실은. 합쳐 보면 연간 제가 얻었던 소득의 상당 부분이 그런 정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다만 이게 부부간의 증여로 과세를 해야 되냐 아니냐인데 국세청에서 현실적으로 부부간에 금융자산 명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한 사례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게 증여로 문제 된다고 하면 제가 증여세를 당연히 내야겠지요.

○**신동욱 위원** 오늘 새로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걱정에 한 번도 돈을 못 썼는데 10억 원 정도는 쥐도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이게 줬다기보다도 같이 공동, 공유재산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석준 위원 예,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과거 기재위 위원 시절에 동부제철 채권에 투자한 적이 있으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저도 최근에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저의 배우자가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 배우자만 하셨나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어쨌든 이게 제 배우자가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저희 가족들 전체 같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자녀분들도 차녀가 3000만 원, 장남이 15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당시 차녀 나이가 21살, 장남 나이가 19살인데 이 어린 나이에 채권 투자를 했다는 게 잘 납득이 안 가고 또 자금 출처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이들이 벌었을 리는 없는 거고요. 특히 제가 벌었던 자산으로 투자했을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증여세 문제는 확인해 봤나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 전체 재산 신고한 내역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자녀들이 원래 조금씩 약간의 예금들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저축 많이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 대충 한 5000만 원 안쪽에서 대개 자산이 관리됐습니다. 물론 그 5000만 원 안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삼천만 원이라도 증여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 명의로 저의 배우자가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때 더 부적절했던 것은, 채권이라는 것은 금리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재위 위원은 기재부의, 금리정책과 관련된 부처의 상임위 위원인데 가족이 이런 채권 투자를 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송석준 위원 그것 좀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과거 발언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대통령실로부터 인사검증질문서 처음 받으신 게 언제쯤인지 기억나시나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공식 발표되기 이틀 전에 제가……

○송석준 위원 공식 발표 이틀 전에?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전에 공소취소 발언을 하셨지요, 그 며칠 전에? 그래서 공소취소 발언과 인사검증질문서 받으시고 또 이렇게 지명된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세간의 의구심이 커요.

그래서 공소취소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예외적이고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부, 단순 절차 위반이니 이런 걸 해서 공소취소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공소취소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송석준 위원 예?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공소취소 사유가 형사소송법에 구체적으로 나열되거나 적

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예외적인 현상이잖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사례 자체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요.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이 대통령 공약 중에 독립몰수제 도입 검토는 하신다고 아까 오전에 발언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국회 입법 과정에서 더 적극적인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것 플러스해서 자산소득 비례 범칙금제 시범도입 이런 것은 어떻게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어쨌든 그런 논의들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형벌의 본인 책임에 맞는 건지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다음에 벌금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비율 상향 이런 것도 어차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일 것 같은데요. 법무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 구조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리고 저도 법원에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서, 지금 법원 청사하고 검찰청 청사가 어느 지역이나 같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역사 유래를 따져 보면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국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려고 그렇게 세팅이 돼서 들어왔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해방 후에도 계속 검찰청과 법원 청사가 지금까지 같이 지어지고 있는데, 법원은 사실 몇십 년 전부터 신청사를 지을 때 따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집요하게 그걸 방해하고 또 기재부를 동원하고 해서 또다시 법원 청사하고 검찰청사가 같은 섹터에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를 법원에 있을 때 지적을 해도 어느 언론사에서 한 줄 써 주지를 않습니다, 검찰 눈치 보느라고. 그런데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인데 판사, 검사 구분을 잘 못 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검찰청하고 법원이 같은 섹터에 있는 건 이제는 국민주권 시대에 안 맞다, 그래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청사가 될 때는 법무부에서 그런 역사를 감안해서 따로 지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중수청이나 이런 게 시설이 필요할 텐데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현재까지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들이 고려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법원과 검찰이 같이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제의 잔재 아니겠습니까? 일제에는 법원 안에 검찰국이

있어 갖고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그런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같은 섹터에 법원, 검찰청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선진국이 취할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오늘 대통령께서 피해자 가족들 간담회를 가지고 세월호 가족들이 ‘진도에 기억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니깐 해수부에서 ‘진도군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하니깐 대통령이 ‘왜 국가 잘못으로 된 일을 지자체 진도에다 하라고 하나. 중앙정부에서 전부 해라. 예산도 다 대라. 관리비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에 타운홀 미팅 처음 오서 가지고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물어물하는 내용을 보고 ‘이것 대통령실에서 TF 만들어 가지고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서 해라’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배 터져 죽고 지방은 배고파 죽습니다. 지자체에 힘없다고 내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인노동자나 계절노동자들이 해남에도 거의 1만 명이 있습니다. 완도에도 진도에도 1만여 명씩 있어요. 그 외국인노동자를 빼 버리면 농어촌에서는 실제로 생산활동이 안 되고 그분들의 소비가 경제를 지탱해 주는데 지금 인구 센서스에 그 사람들은 포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센서스에 그분들을 상주인구로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민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 듣고 싶고요.

서영교 위원께서 일본, 건진법사 비밀 홀에서 그게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엇그제 제가 주진우 기자하고 같이 방송을 하는데 주진우 기자가 천공 스승을 인터뷰했더라고요. 천공 스승이 뭐라고 하나? 동영상에 나와요. 지금도 ‘이재명은 틀렸고 윤석열이 7월 달부터 좋아진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술에 빠져 있는 윤석열, 김건희가 몽상 속에 지금도 있지 않은가 해서 이런 것은 검찰에서도 법적 검토를 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했는데?

그리고 건진법사, 부인이 검찰 인사 청탁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창수 전 서울지검장 부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장동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후보자님, 검찰개혁의 핵심 주제 중의 하나가 정치적 중립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런데 지금 정치적 중립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어쨌든 전체 기소되거나 아니면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사건의 1%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을 하고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폐지해 놓고 수사권을 다 나눠 놓고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어쨌든 이 검찰청 폐지법안 4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에서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법무부장관 취임하시면 시행령 곧바로 개정하실 건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시행령은 어쨌든 대통령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겠습니다. 개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동안 민주당에서 공격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취임하는 그날로 개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이게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위원** 그리고 지금 특활비가 추경에 포함됐습니다. 아시지요? 특활비나 이런 예산들이 전부 다 0원으로 삭감이 됐었는데 완전히 삭감됐던 이유는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특활비를 쓰게 되면 앞으로도, 올해 예산이 아니더라도 내년에라도 특활비가 편성되는데 민주당이 지난번에 요구했던 만큼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 특활비는 전액 삭감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특활비가 편성이 된다면 그리고 이걸 사용하신다면 이 특활비를 0원으로 삭감할 때 민주당이 요구했던 수준의 증빙자료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국회에 제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존중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동혁 위원**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살려 놔는데 삭감한 이유가 증빙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는 돈을 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쓰신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검찰이 이 예산을 쓰신다면 반드시 지난번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수준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은 다시 0원으로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명확하게 좀 밝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어쨌든 예산집행의 원칙에 따라서 분명하게 집행할 것이고 또 그렇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증빙도 국회에서 요청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후보자님 오늘 고생 많으신데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인 부분을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특검이 윤석열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요. 출정 거부를 하고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일단 피의자를 지금 구금하고 있는 해당 구치소에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관련 판례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대법원 판례인데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구치

소에서 안 나오면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렇게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데 왜 서울구치소가 제대로 협조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공교롭게 서울구치소장이 보니까 김현우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특성 때문에 이런 건 아닐까 싶은데, 이분이 올 2월 달에 서울구치소장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어디 있었냐 보니까 수원구치소장으로 있었고, 수원구치소장 시절에 무슨 일을 했었냐면 우리 법사위에서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청문회를 하면서 연어·술 파티를, 출정기록을 제출해라 하니까 그 출정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국회증감법에 따라서 출정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면서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한 것이 결과적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볼 때 예뻐 보였는지 올 2월 달에 대통령 탄핵 파면 선고가 되기 전에 인사를 한 것이지요. 물론 직무정지가 돼서 직접 인사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은성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특검에 불출석하고 조사도 받지 않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초래된 것 아닐까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구치소장 교체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원구치소장 시절에 국회증감법을 위반해서 자료제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관련해 갖고 해당 당사자의 어떤 위법행위나 직무유기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재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재재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 시간은 어떻게……

○**김용민 위원** 3분이지요.

○**곽규택 위원** 5분으로 하시지요, 너무 짧아 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어.

○**위원장 이춘석** 재보충질의를 3분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3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김용민 간사님 말씀이, 아까 제가 김기표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후보자이지 장관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관님한테 부탁하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뭘 어떻게 해 달라…… 지금 아직 권한도, 자격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교도소장을 교체하느니, 어떻게 해야 되느니 그 말씀을……

지금은 우리가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데 동료 위원님들 아무리 가깝고 또 여당 위원님이라고 하시더라도 법무부장관후보로서의 제대로 된 자질·능력, 그런 여러 가지 소양을 검증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지 지금 미리부터 부탁하고 뭔가 요청하는 식의 이런 말씀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검증에 좀 더 집중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발언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용어 선택에 있어서 후보자님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착오해서 장관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송석준 위원 아니요, 호칭이 문제가 아니고요. 호칭 문제 아니고 지금……

○위원장 이춘석 아니, 장관이 되시면 이런이런 부분을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말씀,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런 가정문이 아니고 마치 지금 장관을 불러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하는 겁니다.

○김용민 위원 짧게 반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발언 다 끝나셨습니까? 송석준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송석준 위원 예, 끝낼게요. 하세요.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김용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후보자인지 장관인지에 대해서 용어는 분명하게 후보자님이라고 호칭을 했고.

자, 보십시오. 지금 이런 법적인 문제, 법치주의가 다 무너져 버린, 윤석열 정권 때 법치주의를 다 무너뜨려 놓은 이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이 되셔야 될 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무너진 법치주의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 답변을 듣는 것은 자질 검증, 정책 능력에 대한 검증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후보자 자질 검증과 상관없습니까? 전형적인 자질 검증의 문제입니다.

다만 표현할 때 ‘되시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라는 건 우리가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뛰어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거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여당이실 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참고하시고, 별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 저도 한말씀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위원장 이춘석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동욱 위원 예.

○위원장 이춘석 정말로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다들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저희가 의사진행상 듣기가 매우 불편한 얘기는 지금도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새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은…… 아니, 법치주의가 다 무너졌다는 것은 그냥 민주당의 주장일 뿐이고요. 항상 모든 상황을 ‘지금은 내란 중이다.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그런 전제를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저건 내용에 대한 반박이지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배우고 오십시오.

○신동욱 위원 조용하세요.

○김용민 위원 조용히 하라는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신동욱 위원 조용하세요. 제 발언 중이지 않습니까.

○**김용민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발언을 하고 있어요. 좀 가르치세요.

○**곽규택 위원** 발언 중이잖아요. 발언 들어 보고 하세요.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께서 좀 중재를 해 주세요.

○**신동욱 위원** 제 발언 중이잖아요, 지금! 제 발언 중이기 때문에 조용하시라는 거예요.

○**김용민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뭔지를 좀 가르치세요. 옆에 송석준 위원님도 가르치세요.

○**송석준 위원** 간사님이 솔직해야 돼요. 룰이 있으면 룰을 지켜야지요.

○**신동욱 위원** 또 얘기하세요.

○**위원장 이춘석** 잠깐만요.

○**신동욱 위원** 아니, 또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춘석**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자제해 주시고요.

○**신동욱 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 덜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말씀 딱 이 부분에서 그대로 멈추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신동욱 위원** 덜 끝났습니다.

○**김기표 위원** 의사진행발언 취지에 맞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저게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춘석** 잠깐만요. 멈추고 제가 한마디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마음대로 하라고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진행발언이 또 의사진행발언을 낳고 그 의사진행발언거리가 또 의사진행발언을 낳아서 정말 국민의, 민의의 전당으로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지켜볼 때 법사위가 반복적으로 서로의 말꼬리를 잡고 계속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국민들이 평가할 때 상원의원이라고 평가되고, 사실은 나름대로의 원칙과 법을 지켜달라는 법사위가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을 지켜보면 사실은 의사진행발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또 의사진행발언을 낳고 그 용어가 또 의사진행발언을 낳아서 감정이 격화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만 해 주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말씀하실 내용 중에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동욱 위원**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맞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장 이춘석** 나머지 부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있으니까.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피의자가 있고 피고인이 있고 다 있습니다, 용어가. 그런데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발언을 들어 보면 모든 것을 그냥 대법원 판결이 난 것처럼 단정하고. 그리고 ‘법치주의가 다 무너졌다’는 주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의사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전혀 존중도 하지 않고 막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저희가 청문회를 원만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하시고 싶은 말씀 주관적 평가가 있지만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국힘은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도 평가하고 그쪽도 평가하는 거지 왜 평가를 하는 것 가지고 그러십니까?

○**위원장 이춘석**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어떻게…… 정확한 표현을 요청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발언의 수위라든가 발언의 내용은 각자 위원님들 정도가 되면 본인 책임하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된 범위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본인 책임하에서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내용을 위원장이 제지하거나 다른 위원들이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끝없는 논쟁거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본인들이 감당을 해 주시고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원활하게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서 다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신청하신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재재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배숙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3분입니다.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려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후보자님, 인류의 성이 몇 개입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기본적으로 남성, 여성 아니겠습니까?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성평등 할 때 그 성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우리가 이러한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하는 이유는 단순한 명칭변경이 아니고, 지금 우리 헌법에는 양성평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제도와 성별 개념이 이 양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 가치를 해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헌법,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전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사망신고 다 양성 가족을 기본으로 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성평등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관련 정책과 법률해석, 행정 운영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포함해서 제3의 성, 트랜스젠

더, 논바이너리(non-binary), 사회 전반의 다양한 성 정체성을 제도화하자는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별 차별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서 우리 가정과 교육, 사회시스템, 법제도의 뼈대를 바꾸고 근간을 뒤엎는 시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동의 없이 정부부처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라고 하면 아주 심각한 사회적 갈등·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국에서 최근에—올해 4월 16일입니다—재판부 5명 전원일치로 ‘영국 평등법상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규정되고 트랜스젠더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 선고 난 것 아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기사는 봤습니다.

○조배숙 위원 보셨지요? 거기 판결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별의 개념이 이분법적이라는 점, 즉 사람은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이 어느 나라냐면 평등법을 통과해 가지고 성이 수십 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알고서 이미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황혼으로 기운 그 사조를 아주 바람직한 사조인 것처럼 강제하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깊은 우리 기본적인 윤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깊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성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이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준비돼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조직 전반을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 오게 되면 더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조화롭게 여야 위원들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저는 이게 어떤 충분한 사회적인 동의나 이런 것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혼란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도 좀 보셔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위원장 이춘석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사면 문제 언급이 좀 나왔는데 결국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사면할 때 형평성이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만약에 수감 중인 국민을 사면한다라고 하면 형량이 어느 정도가 지나야 사면합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특별한 기준은 없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사면할 때마다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내거든요. 통상 3분의 2 이상 수감

을 다 마쳐야 사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3분의 2는 살아야 나머지 잔형을 면제하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그 죄명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살인범이나 이런 중한 범죄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피해 회복되지 않으면 사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시비리나 채용비리는 누군가 떨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면을 하지 않거든요.

예전에 A여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조국 전 장관 사건하고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시험지 유출한 아버지에게 대해서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혹시 사면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3년이 선고됐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 쌍둥이 딸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다.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다 그게 됐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죄질이 안 좋지요. 시험지를 유출해 가지고 내신을 올리는 데 쓴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고등학교 때 들키다 보니까 대학입시에 쓰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형이 선고됐고 사면이 되지 않았는데……

결국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지금 유죄로 확정된 죄명과 범죄사실이 혹시 몇 개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아마 잘 모르실 텐데 한 7개 정도 됩니다.

저도 지난 사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내용을 보면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활동 예정 서라든지 인턴십, 변호사 사무실 인턴십, 미국 대학 장학증명서, 동양대 표창장 이런 것들이 다 위조되거나 조작돼서 실제 연대 대학원, 충북대 로스쿨 또 의전원 같은 데 진학하는 데 다 쓰였어요. 그러면 그때 쓰였을 때 누구인가는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량 2년인데 6개월밖에 수감 생활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 국민과 형평성이 맞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화영 부지사도 사면 문제를, 감옥에 있으면서 본인 사면을 막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해충돌 문제를 떠나서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형량의 3분의 1은커녕 7년 8개월 중에 거의 살지도 않았는데 사면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일단 과거의 일반적인 형사범 관련해 가지고 3분의 2 정도 수용 기간이 지나야 되고 또 그다음에 피해 회복 문제라든가 피해자와의 관계 이런 점들이 고려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측면도 좀 고려하고 있고, 특히 정치인들 사면에 관련해서는 또 여야 관련된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런 측면들이 많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사면에 관련해서 제가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데 주무 장관으로서 뭔가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적절하지 않거든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어쨌든 뭐……

○**위원장 이춘석** 다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위원장 이춘석 다음에는 광규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택 위원 후보자님, 국회의원 경력 말고 변호사로서 직접 사건 수임하시고 한 그런 경력은 몇 년 정도 되시나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제가 92년도 3월에 변호사 등록해서 2014년도 8월에 휴업했습니다. 일단 변호사로서 등록 기간은 그렇습니다.

○광규택 위원 그러면 굉장히 오랜 기간 변호사로 직접 일하셨는데요. 형사사건도 많이 해 보셨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민사사건을 많이 했습니다.

○광규택 위원 형사사건을 경험해 보실 때 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나 판사가 정치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이런 우려보다는 사실 내 의뢰인 사건을 조금 더 열심히 수사를 해 주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해 주고 이런 것에 변호인으로서 조금 더 필요성을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광규택 위원 지금 법무부장관후보자 중에서 변호인으로서의 경력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검찰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 이런 부분도 그런 실제적인 사건을 접하는 국민들의 편에서 보다 더 보시는 시각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피해자 중심의 사고를 가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주장하는 고소인·고발인들 이런 분들이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규택 위원 그래서 오늘 모두말씀 중에서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민생을 침해하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척결 이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하셨어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광규택 위원 혹시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 ‘고소·고발 사건 급증에 뒤로 밀리는 보이스피싱 수사’ 이것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오늘 제가 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광규택 위원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실제로 그런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업무가 너무 늘어 가지고 수사 경과,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으로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과라는 경찰에서 일종의 수사 자격이지요, 수사 경과 취득한 경찰관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외칠 때는 그런 사건을 경찰에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고 검사의 수사지휘만 없으면 자기들이 엄청나게 빨리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어요. 하고 보니까 경찰에서 ‘나 수사하기 싫어’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제도의 변화를 요구했던 그런 것의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 알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추가적인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어쨌든 검찰개혁법 관련해 가지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는 누가 수사의 주체가 되는지, 수사 주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들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좀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박상용 검사, 이화영 쌍방울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의원을 몇 번이나 불러냈을까요? 구치소에 가 있는데 검찰로 부릅니다. 김성태는 몇 번이나 불렀을까요? 방용철은요? 저는 이게 완전히 조작된 수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성호 법무부장관 내정자님, 후보자님, 얼마나 불렀을까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정확한 숫자는……

○서영교 위원 여기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백열한 번을 불러요. 이게 됩니까? 그리고 백서른아홉 번을 불러요. 그리고 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이렇게 66회, 92회, 같이 부른 시간이.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같이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공범이라 그러거든요. 안 되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같이 불렀어요. 이것은 다 조사 자료에 나왔어요.

그리고 불러서 그다음 장면, 환이네몽티기, 육횃집이에요. 저희가 집 다 찾았거든요. 환이네몽티기에서 30만 9000원을 김성태 관계자가 영수증을 처리해요. 수원지검에서 차량으로 6분 거리인데 6월 18일 일요일 날 이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서 환이네몽티기를 가져다가 먹어요. 이런 것 완전히 문제가 있는데, 박상용 감찰하셔야 돼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수사 과정에 어떠한 문제점이나 또 위법한 점이 있었는지 면밀히 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지금 나온 이야기로는 배상윤이라고 하는 KH그룹 회장이 ‘저는 돈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에다 준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녹취가 나와 있고요. 이러한 모든 것 제가 여기서 여러 번 틀었는데요. 뒤에 계신 분들 꼭 뒷받침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선후보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난도질해 가면서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와 그 일당들 확실하게 감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또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사랑이법, 태완이법, 구하라법 아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서영교 위원 태완이법 만드는 데 아주 오랜 세월 걸렸어요. 구하라법 만드는 데 6년 걸렸어요. 법무부가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지금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못 하는 수많은 그림자 아기가 있어요. 해외에 가 있는 아기가 부모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적이 달라서…… 너무 안타까워요. 부모가 국적이 달라서 출생신고 못 하는 아이가 너무 많아요. 지금 공식적으로만 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거기 있는 가이드가 해외에 있는 사람이라 결혼을 했는데 아기 출생신고를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낳지도 못한다고 하고 그런데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도 못 하고 그런 그림자 아기, 출생신고를 못 해서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래서 아이는 이런 대한민국…… 이 모든 법이 법무부의 가족관계등록법입니다.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찾아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서영교 위원 제가 전화드리면 받아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야 합니다. 태완이법 만드는 데 수년, 구하라법은 6년……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저는 위원님들의 전화는 언제든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법안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의 틀에 매여 가지고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아니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평이 좀 넘는 구치소의 독거시설에 있지요. 그런데 에어컨이 없니 운동을 안 시키니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부적절한데, 지금 현재 교도소 과밀화 실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호텔 같은 시설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마는 기본적으로 인권이 무너지지 않는 환경은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최소 수용 면적은 혼거실 기준으로, 여러 명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수용자 1인당 2.58㎡, 그러니까 약간, 0.75평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이 최소 기준인데 이게 지금 다른 선진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도 굉장히 적은 수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관후보자님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실제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에서는 상주교도소가 12.07㎡, 그러니까 한 4평이 좀 안 되네요. 거기에 5명 정원인데 8명을 배정했다고 권고 조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이 지금 들어가 있는 방에, 사실은 보통 혼거시설이면 5~6명이 쓰는 방이에요. 그런데 혼자 있는 방에서 선풍기나 에어컨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후보자님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셨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한 어떤 복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밀 문제 때문에, 이게 헌법재판소도 대법원에서도 위헌이 나고 또 위헌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까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줄이려고 하면 가석방을 해야 되는데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하면 가석방 인원을 좀 늘리는 식으로 엄중하게 심사해야 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게 결국 시설과 인원을 확충하는 겁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다고 교정청을 신설하는 것이 정답인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법무부 대부분의 조직이 지금 교정 당국인데……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 부분도 해결이, 근본적인 대책인지도 잘 모르겠고.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위탁하거나 이런 아이디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개방형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는 것 같은데 장관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잠시 정회했다가 8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재보충질의를 실시합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 문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면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사면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이 바라는 사면은 국민 통합적 관점의 기대가 크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을 했습니다.

우리 편 살리기가 아니라 사면이 생계형 범죄가 중심이 돼야 하고 또 정치 관계인들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균형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기본적으로 국민 통합적인 측면들이 고려돼야 된다는 점, 특히 정치인들 관련해서는 그런 점이 고려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박준태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 전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화영 지사는 대통령의 사건 관계인이구요. 또 이해관계가 강하게 얽혀 있는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점이 반드시 고려돼야 될 필요가 있고 국민께서도 그런 점은 눈여겨보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 관련해서는 많이 여쭙지 않았는데요, 아까 오전에 친척한테 5억 원 빌려준 것과 관련해서 ‘원금도, 이자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그분 사정이 어려워 다시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도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 저는 이게 편법 증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차용증에 보면 2010년도에 빌려준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이전인 90년대 어느쯤에 빌려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90년대에 5억 원이면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그게 수십억 가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2000년도에 출마하실 때 후보자님 신고 재산을 보니까 2억 4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당시 가지고 계셨던 전체 재산보다도 더 큰 금액을 빌려줬다 이런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좀 석연치 않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다른 후보자들처럼 이게 본인이 빌린 게 아니라 또 빌려준 거고, 친족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하여튼 편법 증여의 오해가 있지 않도록 잘 좀 조치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어쨌든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요. 제가 사실은 2004년도에 5억 할 때는 원리금을 합쳐 갖고 결정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한 1억 정도는 변제를 받았는데 그 후에 다시 원리금을 합쳐 가지고 5억의 차용증을 쓴 것은 사실은 채무 존재 확인한다는 그 이상 의미도 아니었고 또 최초에 신고를 해 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어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떻게, 이런 것을 계속 재산 신고를 해야 될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증여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90년대 중반에는 사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 변호사로서는, 위원님이 열람을 원한다면 제가 열람해 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건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그런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박준태 위원** 아무튼 성실하게 신고하시려고 했던 그 자체는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중요한 일을 하실 텐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아까 서영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박상용 검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이성윤 위원** 이화영 111회, 김성태 139회, 방용철 133회, 안부수 59회를 갔는데 이때

문제 제기된 게 뭐냐 하면 연어·술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하기를 교도관들 수십 명을 조사해 봤더니 ‘술을 반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교도관들이 만일에 자기가 그것을 봤다 그러면 법 위반입니다. 그렇잖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들은 자기가 그것을 봤는데도 제지를 안 하면 징계를 받기 때문에 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교도관들 상대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검 추태 사건 있습니다. 특활비를 동원해서 술을 먹고 거기서 분변을 보는 이런 추태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법무부에 이 사건을 확인해서 조사해서 진상을 알려 달라…… 왜냐하면 검찰이 5년 동안 수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사를 촉구했는데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일체 조사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보고서도 안 줍니다. 취임하게 되면 그것을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울산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는 없지만 어떻게 돼서 이게 문제 제기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이성윤 위원** 아시다시피 출국금지가 많이 남용이 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1개월 이내에 걸쳐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구속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구속 피의자를 자주 소환하거나 또는 출국을 못하게 막아 가지고 사실상 구속 상태와 같이 자백을 받거나 또는 휴대폰 비번을 알아내는 수단으로 쓰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래서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국금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더 문제 되는 것은 출국금지 한 사실을 통지해 주게 돼 있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통지를 유예하게 돼 있어요.

장관후보자님, 저를 출국금지를 했으면 통지를 유예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윤 위원** 저도 출국금지 해 놓고 통지 유예를 했습니다. 그 사유를 알아보니까 애기 안 해 줘요.

또한 출국정지,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서 태국 방콕에서 부동산 업자가 왔는데 출국정지를 해 놓고 못 나가게 하면서 압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출국금지, 출국정지가 수사에서 엄청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출국금지가 어쨌든 수사의 편의성을 이유로 해 가지고 악용돼서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후보자님, 소득주도성장 잘 아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최저임금 인상하고 52시간 단축,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전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 관련해서 제가 그것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최근에 농업 현장, 지역구에도 시설농들이 많이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많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시설농들 애환 많이 겪는 거 아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많이 의존하는데 그분들이 노동 특혜를 오히려, 국내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득주도성장의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국내 노동자들은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혜택을 보면서, 52시간 혜택을 보면서 정말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농민들이 시름이 가득한 것을 제가 요즘 지역에서 많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도대체 내가 농사를 왜 짓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결국 외국인들 돈 벌어 주고, 이게 지금 국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국내 중소기업·중소기업 다 죽이고 농민들까지 죽이고 있어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결과가 다른 이 잘못된 정책,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지적을 못 하고 있어요.

더구나 52시간 단축은 지금 첨단기업들, 예를 들면 제 지역구에 있는 SK하이닉스의 첨단R&D센터에 근무하는 유능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싶어도 이런 법적 제약 때문에 제대로 깊이 있는 연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구호만 거창했지 결국은 대한민국을 좀먹는 제도가 된 게 바로 문재인 정권 때 일관되게 시도했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쉽게 포기 못 하는 소득주도정책의 잔재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정말 한 번 도입하면 없애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바뀌야 될 것은 바뀌야 되겠지요.

그래서 또 하나 묻습니다.

지금 검수완박 1 해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 후에 수사, 사건 처리기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 그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들어 봤습니다.

○송석준 위원 얘기 들어 보니까 보완수사의 경우에는 무려 종전보다 2배 또 재수사 요청 시에는 3배까지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실제 목표하는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지요. 이번에 검찰개혁 소위 시즌2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목표 상황과 현실 상황이 굉장히 괴리되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중하게 고민하고 정확히 실태를 한번 진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과거에 시행됐던 정책들의 문제점들을 잘 검토하고 또 저희도 실상이 어떤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련해 갖고 제가 누차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지만

보다 좀 집중적인 논의를 계속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인 상황을 파악해 갖고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후보자님, 가벼운 질문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입국 기록을 좀 받아 봤는데 10년 동안 해외를 전혀 안 가셨더라고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신동욱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사실 제 지역구가 제가 소속된 정당이 당선되기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으면서 지역구 관리, 굉장히 어려워 갖고요 저는 삼선 될 때까지는 국회와 지역구만 많이 왔다 갔다 했었고 소위 휴가 기간에도 전 지역구를 계속 순회하고 다닌 그런 일정들……

○신동욱 위원 의원외교 이런 차원에서도 전혀 안 나가……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제가 국내 의원외교 해당 나라의 회장도 맡은 적 있었지만 외국에는 출국 못 했습니다. 다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적극 잘 모셨고요. 그랬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10년 동안 안 나가셔서 너무 안 나가신 것 같아 궁금해서 여쭙았습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정말 힘이 세더라고요. 그 힘이라는 게, 물론 저희가 상임위 활동도 있지만 법안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데…… 후보자님 말씀은 여야가 잘 대화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 주면 수용하겠다 이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지금 제 경험을 보면 법안에 대해서 협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표결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전에 공소취소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흘 만에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된 것 아니냐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7월 10일 날 아까 말씀드린 법안, 윤석열 총장·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법 이게 있는데 그러면 검찰권 오남용이라는 것이 그 검찰이 그 검찰인데 꼭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재임이나 검찰총장 재직 시’ 그러면 그전에 검찰이 오남용한 것은 이 법안에 전혀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 내용을 보면 정말 제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런 법이 나오는 게 정말 개탄스러운데 진상조사 대상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에 검찰권을 남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또 자의적 오남용이 현저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사건, 전부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임위원 3명을 집권당 그리고 제1야당 그리고 비교섭단체 중에, 지금으로 보면 조국혁신당이 됩니다. 그 두 분이 상임위원이 되는 것인데 이 의혹의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자의적이고 불명확해서 저희는 이런 법안을 만약에 민주당이 밀어붙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게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47조에 숨겨 놓은 공소취소할 수 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못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일단 장관으로서는 그런 의심이 들지 않게 제대로 처신을 바로 하겠고요.

다만 이 법안의 내용은 제가 명확히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적 견해가 갈리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에는 장동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후보자님, 아까 여당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것이 깊은 고민을 하고 답변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여당 위원님 질문에, 보통 어느 법원이든 가면 예외도 있습니다마는 오른쪽에 법원, 왼쪽에 검찰청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그렇게 같이 뒤야 되는지, 이제는 좀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럴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맞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변호사 업무 하신 적 있으시지요? 아까 말씀을 그렇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장동혁 위원** 쉽게 법원이나 검찰청 앞의 법조타운 그런 데 사무실이 있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바로 법원 정문 앞에 있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렇게 법원 정문 앞에,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법원 정문 앞에 두는 이 유가 있을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일단 의뢰인들의 편익을 위하고……

○**장동혁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재판 시간에 맞춰서 가려면 아마 그 앞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검찰청과 법원이 분리되어 있을 때 어떤 불편함이 그리고 어떤 업무의 비효율이 올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더군다나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유지만 하는 공소청으로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검사들의 업무는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에 관여하는 것,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업무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기록을 들고 법원에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와 가지고 나머지 업무를 해야 되고. 그런데 법원과 검찰이 떨어져 있다면 저는 그 업무의 비효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상징적으로 왜 법원과 검찰이 붙어 있어야 되지, 예전처럼 검찰이 법원의 하부기구도 아니고 법원 내의 한 조직도 아닌데 왜 청사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그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업무의 비효율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그리고 민원인들도 예를 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 관련해서 벌금 납부나 이런 것들을 곧바로 검찰청에 가서 묻거나 민원 업무를 처리해야 될 수도 있는데 건물이 떨어져 있다고 할 때 그 민원인의 불편함이나……

이제 오로지 검사의 업무는 매일 법원에 출석해서 공판에 관여하는 건데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검사들의 여러 업무의 효율과 비효율을 비교해 봤을 때 그냥 만연히 이 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건물 2개 떨어뜨려 놔야 된다, 그게 국민들의 감정에도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확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이 어떠신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런 측면도 있고요. 과거와는…… 이해관계자들의 이동이 사실은 지금 더 편해졌지 않습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더군다나 또 공소청과 중수청이 장차 분리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설치할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실제로 시설을 하게 될 때 예산 확보라든가 부지 확보하게 됐을 때 두 기관이 같이하게 되니까 굉장히 지연되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점을 사실 염두에 두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에는 김용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후보자님,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수사·기소를 우리가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당연히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원리에 따라서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하고 남용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지요.

지금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서 피고인·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건을 조작시켰던 게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검찰에 권한이 집중돼서 피해자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자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집중돼서 피의자를 수없이 많이 괴롭히고 때로는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사법 살인도 시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검찰개혁의 방향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도 계속 발전해 온 방향이 피의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였습니다. 국가권력이라는 것이 너무 막강하고 국가권력이 합법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할 수 있는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인데 여기서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막으면서 그러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가 형사소송 제도 발전의 방향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검찰개혁,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도 아주 중요한 가치지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하자는 게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를 너무 많이 침해했기 때문에, 사건을 조작해 왔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띄워 놓는다, 이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유, 목적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먼저 조직에 대해서 충분히 분리시켜 놓고 권한을 분산시켜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조직 간에 운용되는 혈관 역할을 하는 그리고 운용 시스템 역할을 하는 수사절차법이나 형사소송법은 별도로 손을 보고 그러면서 피해자의 권리구제도 소홀하지 않게, 충분히 보장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우선순위와 일의 접근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우리는 피해자의 권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검찰권 강화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 피해자가 무고한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관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재재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제가 가벼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도 하셨고 또 피곤도 하실 텐데.

후보자님, 잠깐 뒤를 한 번만 돌아보실래요.

뒤에 저기 붙어 있는 게 후보자님이 잘 아시다시피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흠흠신서’입니다. 저 내용을 쭉 보면 법을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몸가짐을 해야 하는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을 보면 사실은 법을 다루는 사람이 산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삼가고 또 삼가라 하는 뜻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법사위에 오래 계셨으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위원장 이춘석** 그래서 제가 저것을 딱 보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좋은 말을 왜 위원장만 자꾸 보고 있어야 할까. 저 뒤에 계신 분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저것을 보면 진짜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고민이 위치를 좀 바꿔 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석을 지금 후보자가 앉아 있는 석으로 바꾸고 모든 사람이 이쪽에 와서 저걸 날마다 한 번씩 읽어 보면 사실은 권력기관인 검찰, 법원, 감사원 이런 데가 다 좀 달라지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장님의 애민정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고요. 저는 좋은 의견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한번 바꿔 볼까요, 위치를?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한번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다음은 재재보충질의입니다.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 여기서 더 질의를 하시는데 재재보충질의까지만 하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원하시면 다 하셔도 좋습니다. 3분 정도로 정리하시면 9시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배숙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PPT를 못 띄웠는데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 소개를 못 했습니다. 이게 지난 주말 오후 시청역 부근입니다. 폭염, 아스팔트에서 전국 각지에서 5000명이 와서 집회를 한 겁니다. 지금 이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반대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 주시라는 의미로 제가 덧붙였습니다.

다음 띄워 주시지요.

지난 7월 7일 날 과방위에서 방송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요즘 통과되는 법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YTN입니다, 저기에 해당하는 게요. 문제가 굉장히 많습시다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여기는 YTN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섭대표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서. 그렇지요?

지금 YTN은 민영화됐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인수할 때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건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3200억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시세의 3배를 주고 주식을 샀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증자함으로써 300억이 더 들어가서 3500억, 완전히 민영입니다.

그다음 또 띄워 주세요.

부칙에 보면 3개월 이내에 저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저 법이 통과되고 나면 3개월 이내에 노조하고 협의해서 사장추천위원회를 해라 이렇게 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좀 너무 과도하고 위헌 아닌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모르겠습니다. 과방위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법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헌법 제126조에 보면 국방상 등 긴절한 필요 이런 게 없는 한은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민간기업의 경영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적자치 그다음에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채널이 민간보도 채널인데 중편도 있고요, 민영 지상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송사도 있어요. 시청률이나 국민에 대한 영향력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제한이 없지요.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제한을 하는지, 평등권 침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굉장히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타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위헌 여부는 우리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권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제가 어떻든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말씀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조배숙 위원** 이건 너무 심해서 이 정도는 좀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너무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검찰 4법에 대해서 아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한 말씀드릴게요.

국가수사위원회랑 중수청을 신설하는 걸 전제로 보면 지금 세계 국가들 중에서 연방제 국가가 아닌데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복잡한 수사 체계를 갖춘 나라가 또 있습니까? 혹시 입법례 확인해 보셨어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제가 과문해서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렇게 복잡한 수사기관이 난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있으면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법안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는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대법관 30명 증원안이요, 대법관 30명 증원할 때……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정말 이게 사법개혁상 필요하고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야당일 때는 한 번도 얘기 없다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에 대해서 14명 중에 과반 이상을 임명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30명으로 증원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검찰에 있는 오랫동안 수사를 해 와서 지금 훈련돼 있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은 그대로 공소유지 업무만 맡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예산 쥐 가면서 키워 온 전문인력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사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 보조 외에 공소유지만 하게 되는 건데……

반면에 중수청은 몇 급부터 몇 급까지 뽑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주력이 1급 수사관부터 5급 수사관이예요. 지금 다른 행정 공무원들로 따지면 굉장히 고위직들입니다. 1급·2급·3급·4급·5급 그 정도로 중수청 수사관을 뽑아야지 검사에 걸맞는 경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겠다고 해서 그렇게 발상을 한 것 같은데 중수청 수사관을 이번 정부에서 다 증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본질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중수청 관련된 게 정말로 필요했다면, 예를 들어 중수청 수사관들도 전부 다 지난 정부에서 뽑을 수 있다고 하면 민주당이 찬성했을까요?

이게 공수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만들어진 지 한 5년 됐어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민주당 관련해서 수사해서 기소한 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아예 여기 계신 민주당 관련된 분들…… 물론 공수처가 갑자기 만들어지다 보니까 무능해서 국민의힘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관련 수사가 진행된 것 중에, 5년

이나 됐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민주당 때 민주당 정부에서 거기를 다 충원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중수청은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 하나 또 만들겠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중수청 수사관의 충원 문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전원 다 공수처로만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현재 검찰청에 계신 검사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하는 거는 또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위원** 그분들을 강제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박균택 위원님 질의……

○**박균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광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택 위원** 후보자님, 20대 국회 전반기 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하셨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광규택 위원** 그리고 21대 국회에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도 위원장 하셨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광규택 위원** 그런데 21대 국회 때 했던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이게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후에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위해서 가동했던 건데 두 번 회의하고 아무 성과 없이 끝났었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송구합니다.

○**광규택 위원** 그러면서 위원장이었던 후보자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국회에서 법을 실컷 만들어 놓고 정작 필요한 후속 체계를 논의하자고 만든 특위를 그냥 회의 두 번 하고 끝낸 거거든요. 저는 이런 현상이 또 생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슬라이드 한번 좀 띄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실용주의가 중요하다. 저는 뭐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형사사법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보다는 실제로 국민들에게 어떤 수사시스템이 맞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나 여기에 맞는 사법시스템이 되어야지 우리 정권의 유불리를 따져 가지고 특정 정당의 과거 나를 상대로 수사했던 검사 너는 정치검사야, 그런 낙인으로 사법시스템을 개혁한다면 그건 완전히 실패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보시면 검수완박 이후에 6개월이 초과되도록 수사 결론이 안 난 사안이 2022년 기준으로 14%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거의 1만 건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간다는 생각 하지 않으시나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후속조치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많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 21대 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어떻게 했냐고 하면 의사일정은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위원장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여야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제가 무능력해서 조정 못 한 잘못도 있지만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문제점들이 향후에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특히 마약사건 같은 경우에 마약사건 수사를 검찰에서 못 하도록 했던 시절에 그 단속 건수가 확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약사범이 줄어든 건 아니었어요. 단속을 못 한 거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다시 검수원복 된 이후에 이 사범이……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만든다고 한다면, 기소·수사 분리 이런 도그마에 빠져 가지고, 실제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과 통계하에 해야지 그냥 기소와 수사는 분리하는 게 맞아 하는 그런 생각만으로 현실에 접근했다가는 결국 국민들께 피해가 돌아가는 사법체계가 된다 하는 점을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오늘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법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당론으로 발의한 법입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제가 대표해서 윤석열 검찰총장·대통령 재직시의 비위에 관한 특검법을 또 발의하기도 했었고요.

왜 이 법이 발의가 됐냐 하면 윤석열 검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과 대통령 재직 시에 무리한 위법한 수사, 검찰권 남용을 통해서 그 사건들이 조작되고 왜곡되고 그래서 무죄가 나거나 잘못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그 피해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발의가 된 법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해서 발의된 법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아까도 말씀드렸던 김학의 출금 사건 그다음에 월성 원전 사건 그다음에 울산 사건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무리한 가혹한 위법한 수사들이 있었습니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학의, 월성 원전, 울산은 모두 무죄가 났기 때문에 그 무죄로 인한 사건이 과연 위법하거나 부당한 검찰권 남용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발의된 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지금 3개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이 특검은 모두 구속된 윤석열 내란 수괴 범죄자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법에 사면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괴,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대통령도 사면을 금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면법을 개정해서 윤석열 등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에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내란범죄가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의원님의 관련 입법 발의 취지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게 아닌지 그런 점들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리고 제가 올 1월에 내란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판결 확정 이후에는 경호와 경비 모두를 제한하는 전두환 방지법을 또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구속되어서 나중에 유죄가 선고가 되면 오랫동안 아마 구금되어 있겠지만 이러한 내란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나 경비를 제한하는 이런 전두환 방지법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역시 국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저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갖고 법사위에서 좀 잘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 경기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후보자님, 자꾸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얘기가 돼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5월에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권한을 경찰에 대폭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라든지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 후속조치를 사실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사개특위가 구성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당시 위원장으로서 활동하셨는데 9개월 동안 전체회의 단 두 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었잖아요. 그 원인은 정부가 바뀌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돼서 시행령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버리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그때 권한쟁의를 아마 당시 법무부장관이 신청하고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참여를 안 했던 거지요, 사개특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사개특위 활동이 안 됐던 건 그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이미 사실상 식물 상태에 그 이전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첫 전체회의 이후 218일 만에 개의원 두 번째 회의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된 이후에도 국민의힘에서 참여를 안 했던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 당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는 어쨌든 특위 운영이, 특위 운영에 관련해 갖고 제가 그 당시 민주당의 원내지도부에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적어도 저를 위원장으로 내정해 놓은 상태에서 합의가,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결정한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이 합의가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었고 또 지금 와서 누구를 탓하기는 그렇고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한쪽 일방 당사자가 안 하겠다고 하면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구조가 됐군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국민 여러분한테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표현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일을 안 했는데 세비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위원장 앞으로 나온 4000만 원의 세비도 모두 반납하거나 기부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업무추진비를 전부 반납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그때 실제로는 후보자가 다 가지고 가도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요, 법적으로? 그러나 그런 것을 내가 활동한 것이 없었으니 다 반납하겠다 이래서 오히려 반납을 했던 상황이었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그 구조상 양당이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때 조금 더 양당이 정치적으로 합의가 돼서 했으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조금 더 원활히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들고,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우리가 검찰개혁 법안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드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화면 좀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앞선 질의에서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말씀하는 검찰개혁법이 저는 검찰해체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이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인데 이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편파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국회에서 4인 선출하는데 최소 두 명은 민주당에서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세 명 한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네 명 지정하고 추천위원회는 세 명 지정하는데 추천위원 다섯 명 중에 네 명은 정부 측 인사입니다. 누가 봐도 열한 명 중에 아홉 명, 최대 열 명까지는 지금 정부에서 임명하는 분들로 권한이 행사되는 겁니다.

다음 장이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냐면요 저기 지금 써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얘기들입니다. 수사사무 감사한다고 그러지요. 수사사무 담당 공무원 비위 사건 감찰한다 그러지요. 그다음에 사건 관련해 가지고 수사기관에 재수사 요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넘겨라, 이첩 지시하거나 그다음에 수사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다음 장 보여 주시지요.

보면, 사무처에 방대한 수사인력들이 또 구성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처장을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겁니다. 5급 이상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이면 전체 아닙니까? 1~5급 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일반직 행정공무원도 고공단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어마어마한 수사 권력을 갖게 되는 기관이 지금 운영되는 정부에서 모든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단순히 이재명 정부가 사법 감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한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훨씬 넘어서는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정치적인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통과시키자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당 원내대표가 지금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물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든 생각해 보시면 그런 특위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어떤 안의 장단점을 놓고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이 된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그 모습들이 중요하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저도 국회에서 일을 해 봤는데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해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국회가. 그래서 해당 분야에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야당 대표께서 어떤 제안이 잘못됐다기보다도 과거에 특위를 구성해 갖고 실질적 성과를 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특위가 입법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회가 상임위 중심 체제로 가야 되고 또 지금 상임위에 계시는 여야 위원님들이 이 법안에 관해서는 더 잘 압니다. 법사위원님들이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분들을 모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또 자기 상임위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법사위에서 하나하나 잘 점검하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야가 법안을 가능한 한 큰 틀에서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준태 위원** 지금 민주당에서 전당대회에 나오신 당대표 후보자들께서 ‘추석 전에 무조건 결론을 내겠다’ 이런 정치적인 선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겁니다.

어느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든, 후보자님 말씀처럼 법사위가 더 전문성 있게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게 좋다는 그 말씀의 취지는 제가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법사위에서 정말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를 후보자님께서 확실하게 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제가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또 두 분 간사님도 그런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좀 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거고, 지금 더군다나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계속 시간을 끌면 끝수록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라든가 일반 국민도 불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같이 테이블에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후보자님, 지금 말씀 참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게 충분히 상임위가 활성화되고 또 법률·법치 주의, 사법제도의 전문 상임위인 우리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들과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숙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면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만 그동안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그동안 법사위에서 얼마나 많은 법들이 제대로 된 숙의도 없이 숫자 논리에 의해서 다수결 논리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고 제대로 된 대체토론도 모양 갖추기 하고는 바로 종결되고 숫자로 다수결로 처리되고 그러기를 반복돼 온 걸 지켜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또 이렇게 중차대한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조직을 훨씬 더 많이 만들고 또 옥상옥으로 국가수사위원회, 국수위라는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자체가 보다 더 민주적이고 보다 더 수사과 기소에,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갈라치기 하고 그것을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더 월권적 기관이, 새로 만든 아주 기형적 공룡조직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전문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더 벗어나서 고도로 정치화된 조직이 모든 수사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조정하고 말 안 들으면 징계까지 하고 처벌하겠다고 하는 무지막지한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법사위에서도 상정은 됐지만 청문회 한다고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됐는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단 말이예요.

더구나 지금 상법 처리 과정에서도 보면 많은 경제계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동안 경제계가, 지난 문제인 정부 내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또 이번에 노란봉투법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잘 아시잖아요. 그걸 시행하면 우리 사회에서 중대재해가 삭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웬걸? 과거에 없던 전례 없는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 없는 중대재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대신 두려운 건 기업들이예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목적은 달성되지 않고 오히려 기업들의 손발만 묶어서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고 이

제는 기업 하기 어려운 황폐한 대한민국 환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상법도 무리하게 처리가 된다면 기업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고 바로 외국으로 떠나는 러시가 벌어질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것을 법률 문제를 총괄하는 법무부장관후보자께서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 사회의 실태도 잘 아시고 또 법도 잘 아시니까 정말 사법개혁이든 검찰개혁이든 실정에 맞게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오늘 통과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정말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개혁을 그것도 총의를 모아서, 정말 서두르기보다는 제대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하고, 다만 제가 자꾸 같은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정말 저는 우리 국가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법사위가 가장 중요한 상임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비록 하게 휴가철이지만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정말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석**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균택 위원** 장관후보자님, 저는 청문회가 필요 없다고 느낄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후보자를 상대로 조금 편안한 질문만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질문을 앓고 참아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상황이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저도 마음에 담아 뒀던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검찰총장 천거 및 추천 절차가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이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아직 아는 바가 없고 또 후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취임하시게 되면 취임하신 이후에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통상의 경우보다 예상보다 총장 임명 절차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검찰총장 자체가 중요해서 관심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선의 검사장, 차장, 부장 중에 문제가 드러난 검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란에 동조했다 또는 내란 수괴 석방에 동조를 했다 이런 의혹까지도 하고 그리고 또 정치수사를 일삼았던 인물 등등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총장 인사가 늦어지면 그 인사가 너무 늦어지는 또 원인이 될까 봐 저는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검찰에 대해서 직접수사권 폐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살아있는 조직이고 또 여전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빨리 검찰이 정상화 되게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검찰총장이 취임하기 전이라도 검사장들이라든가 또는 정치수사 의혹이 너무도 짙었던 몇 개 청에 대해서는 차장이나 부장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후보자님 취임하시게 되면 필요한 인사조치는 총장이 취임하기 전이라도 필요한 부분은 서두를 수 있도록 관심 좀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면서 어쨌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어떤지 잘 논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끝나셨습니까?

○**박균택 위원** 예.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후보자님,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후보자님께 거는 기대라는 것이 여당도 있겠지만 저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쟁점 법안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송법도 그렇고 노동관계법들 이런 여러 가지 또 최근에 개정된 상법 추가 개정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회의 경험 이 많으시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되어서 사회 각계각층의 얘기를 정말 좀 균형감 있게, 민주당 의원으로서뿐만 아니고 이제 법무부장관이 되시면 청취하셔서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후보자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조금 전에 저희가 속칭으로 친명좌장이다 이런 말씀을 쓰셨습시다만 대통령께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기탄없이 건의도 하시고 이런 역할을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처음으로 대규모 손을 보는 이런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엄청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단순히 어떤 특정 정치세력의 증오심이라든지 또 개혁으로 포장된 정치보복의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개선되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패했던 대표적인 예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내걸어서 수많은 부처에서 당시에 적폐청산 TF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국정원만 보더라도 임직원 350명이 수사를 받았고 그중에 46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재수 기무사령관, 변창훈 검사, 정치호 변호사, 이런 분들이 목숨을 끊었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시점의 어떤 검찰 수사만을 지목해 가지고 그 검찰 수사를 전부 다 뒤집겠다는 이런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이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기에 있었던 검찰 수사는 오남용이 없었던 것인가. 저희가 그것까지 다 뒤집어 보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위험이 굉장히 상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법안을 한번 보시면 이 법안의 내용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거의 의심의 여지없는 정치보복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까지 국회에서 만들어서 마구 적용시켰을 경우에 그러면 그다음에 또 어떤 후폭풍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다수당이 돼서 똑같이 법 만들어서 정치보복하면 그때는 또 반박하시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균형 있게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과거 제가 변호사 할 때 가장 나쁜 화해가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라는 우리 선배들의 법언을 지금까지 저는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 하는 국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는 게 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경우, 그렇게 되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안 됐을 때 정말 부득이하게 다수결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쟁점 법안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님들이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치를 하면서 늘 역지사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야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정말 어떤 게 국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길인지 늘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장동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후보자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지금 설계대로라면 수사 역량이 훨씬 더 높아질까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지금 어떤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바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제가 예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위원** 두 번째, 지금 이 설계대로라면, 특히 국가수사위원회까지 있는데요. 공수처, 중수처 그리고 경찰, 지금보다 훨씬 더 정치적 중립 그리고 정치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혀 권력자의 눈치 보지 않고 그런 수사가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이 제도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설계될지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의원님들이 결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상황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리고 지금 검찰이 수사할 때보다, 수사의 권한을 이렇게 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 놓으면 앞으로 수사에서, 특히 공수처든 중수처든 수사에서, 경찰 수사든 피의자의 인권이 훨씬 더 강하게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는 제대로 운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동혁 위원** 저는 이렇게 설계되고 그리고 권력자가 수사기관들에 대한 욕심을 놓지 않는 한 정치적 중립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남용은 그 권력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해서 앞으로 수사하면서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권력 남용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된다면, 단순히 그렇게 분리해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수사 역량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의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고요 사건 처리는 늦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지 너무 복잡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중수처는 이 규정에 의하면 수사하다가 본인들이 하기에 걱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쉬운 말로 국민들에게 보여 주기 좋은 정치 사건은 서로 뺏어 먹기를 할 것이고요 민생 사건은 떠넘기기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것이 권력자의 힘이 미치도록 만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계된 것, 그 어떤 면에서 효율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그렇게 주장하고 만들기를 원하고 했지만 지금 공수처가 제 기능 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매우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공수처와 같은 기관을 더 만드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러한 점들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석** 지금 재재재보충질의까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장동혁 위원님, 박준태 위원님 두 분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오늘 모두발언 4페이지에 보면 ‘마약범죄에 대해서 강력 단속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마약범죄에 대해서 심각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하거나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마약청을 신설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지금 재소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성범죄 그다음에 마약범죄입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 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일단 일선의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자부터 최종적으로 제조·생산해서 유통하는 그런 과정에 국제적인 카르텔들이 관여돼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이게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 갖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약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그런 고민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니까요, 저는 이민정책은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하면 나중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8페이지 모두발언을 보니까 ‘미래통합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겠다’ 그랬는데 어떤 것이 미래통합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이민정책인지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지역 소멸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한데 또 한편에서는 젊은 세대 일부에서 이민정책의 적극적 추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 이민을 추진했을 때 우리 국가 사회공동체의 안정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리고 역시 모두발언 8페이지를 보면 교정행정의 고질적인 문제를 몇 가지 언급하시면서 교정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정말 어려운 곳에서 힘들게 일하고 계신 교정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처우를 개선하거나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 저하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역시 처우 개선에 관련된 것은 예산입니다. 어쨌든 교정공무원들의 근무 실태가 다른 어떤 공무원들보다도 힘듭니다, 주야 근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과 관련해서 적절한 처우가 될 수 있게 예산 당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문가들의 심리지원 체계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박준태 위원님 마지막으로……

○**송석준 위원** 아니……

○**위원장 이춘석** 아까 두 분만 하기로 정리해서 다……

○**송석준 위원** 아니,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오늘이 중요한 인사청문회인데.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에 1분만 좀 부탁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원래는 오늘 밤새도록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방식이 바뀌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춘석** 일단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5선 국회의원 하시는 동안에요 출판기념회 몇 번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재선 때 한 번 했습니다.

○**박준태 위원** 저도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2013년에, 12년 전에 한 번 하시고요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제가 책을 쓸 능력이 일단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출판기념회가 어쨌든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보면 소위 말하면 책을 직접 파는 것보다도 오시는 분들의 금일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정치인으로서 이런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에서는 대필을 해서라도 출판기념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준태 위원** 후배 정치인들이 배워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김민석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두 차례의 출판기념회 수익이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보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책 판매가격으로는 이렇게까지 나오기 어려운 것이지요.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확인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도개선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님께서 정치자금법 개정안 내신 게 있어요. 이거는 검은 봉투법 이렇게 명명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간주하자, 그래서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그리고 회계보고도 하자, 이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당 조지연 의원이 낸 법안은요 정치인이나 출마할 예정인 사람들은 출판기념회 하지 말자, 누구나 출판의 자유가 있지만 서점에서 팔거나 온라인 판매하도록 하고 행사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책을 판매하지는 않도록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여야 가릴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전체 300명 의원을 대상으로 동의하는 의원님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후보자님께서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동의해 주실 분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인데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야의 동참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하여튼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좀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태 위원** 필요하다면 민주당 의원님께서 내서 같이 좀 병합해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송석준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송석준 위원** 예.

○**박지원 위원** 위원장, 저도 한번……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 3분 하시고 박지원 대표님 3분 하시고.

○**신동욱 위원** 저 1분만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이춘석** 그게 마지막입니까?

○**신동욱 위원** 예,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신동욱 위원님 1분, 합산으로 7분 남았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정성호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그만하라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후보자들, 다른 장관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겹쳤는데 보니까 언론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안 갖는다 그래요. 이유가 별로 그렇게 뒤질 게 없다고, 별로 볼 게 없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제가 그동안에 인사청문회를 해 본 중에 비교적 여러 가지 흠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후보인 것 같아서 우리 법사위 관련 장관 후보자로서 호뭇한 생각도 들고 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이제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걱정을 불식시켜 드리는 그러한 간절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또 사법개혁이라는 화두가 계속 우리 법사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 일부 법안들이 실제 발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답변에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나라의 현실 또 국민들의 기대를 제대로 좀 살피서 악법이 탄생하지 않도록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다. 짧은 기간에 경제 고도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이루어냈고 또 굉장히 어려운 위기상황 때마다 그런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위기 극복의 사례를 계속 보여 왔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도 또 더 많은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대한민국……

내일이 마침 제헌절입니다. 77주년 대한민국 제헌절을 앞두고 법무부장관후보자로써

오늘 성실하게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우리 헌법정신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살려 주시고 또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헌법에 못 담은 여러 가지 부족한 법정신을 우리 법사위에서 그리고 법무부가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저의 오늘 인사청문회 모든 질의를 마치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송석준 위원께서 클로징 멘트를 했는데 제가 나서서 미안합니다.

정성호 후보자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말씀만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주진우 기자하고 같이 천공 스승의 인터뷰 동영상을 보았어요. 그랬더니—이것은 국민에게 알리고 싶어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천공 스승이 지금도 이재명은 옳지 않고 윤석열이 옳다 그리고 7월부터 좋아진다. 그러니까 마치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자, 내란 종식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어쨌든……

○**박지원 위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6·29 선언 하고 나서 5·18 내란이 종식됐다 이렇게 선언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내란 종식이 안 된 겁니다. 또 건진법사, 그러한 일본 신사를 모시고 있고 이게 총체적으로 주술 국가예요. 그러니까 윤석열·김건희는 지금도 천공 스승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교육상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특검에서도 수사를 해야겠지만 검찰에서도 이러한 역술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건진법사에게 부인이 검찰 인사 청탁을 했다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은 전주지검장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 딸 못되게 수사해 가지고 이리 영전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부인이 건진한테 부탁해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 되는 그런 세상이 되면 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물론 특검에서 밝힐 일이겠지만 법무부장관에 취임하면 이 문제도 내부 감찰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법사위에 보고해 주세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박지원 선배님 청문회 다시 시작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약속한 대로 1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부 간 증여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아서 기록을 위해서라도 한 대목 남겨 놓고 싶어서 1분을 청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이 증여세, 11억 4000만 원 돈을 부인에게 증여했는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부분의 증여세가 누락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뒤늦게 증여세 2억 19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가 충분치 않다,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부분은 좀 유감스럽기는 합

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민분들께서도, 계속 후보자께서 ‘부부 간 증여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혹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그동안 저의 삶을 되돌아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각별히 유념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정성호 후보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7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와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0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박희승 서영교 송석준
신동욱 이성운 이춘석 장경태 장동혁 조배숙 주진우

○청가 위원(1인)

전현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출석 공직후보자

정성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최지석